

나오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과는 달리 '검증'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한미일 삼각 공조체계가 이회창-부시-고이즈미 등 대북강경 성향의 정치리더십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부시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리더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2002년 대선은 향후 한반도의 위기 시나리오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2003년이 94년 위기 때와 다른 중요한 점이 또 한가지 있는데, 한반도의 군사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가능한 빨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계획하에 PAC-3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함 등 MD 무기체계를 한반도 안팎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부시 행정부의 MD 설명단 대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안하고 있는 사안이다. 북한의 FROG, 스킨, 노동 등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되는 이들 무기체계는 한편으로는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인정했듯이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MD 배치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오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 전략에 따라 지상, 공중, 해상 폭격 능력 역시 94년보다 훨씬 배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력 및 관련법 역시 94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 역시 남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는 점도 94년과 다른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 상태가 94년과는 비견되기 힘들 정도로 한미-미일동맹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클린턴 때보다 훨씬 호전적인 인물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가 94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시가 클린턴보다 북쪽 결정에 신중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MD 구축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미국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시 선제공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산시킨다는 대확산 전략을 4대 군사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보수적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사파이어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직후, "북한의 장사정포에 취약한 서울은 이에 대응할 무기를 남한에 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김정일의 핵무기 제조 시설은 B-52 폭격기로 파괴하면 된다"5)고 말한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주장인 것이다. 우리가 2년 후의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예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즉 미국이 군사력으로도 훨씬 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만스러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측의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이성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가 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당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도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 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안보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하다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담당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한 나머지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든, 분단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이 어떻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민족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 3. 결론을 대신해서 :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밤,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부시 행정부의 잇따른 대북 강경발언과 북한의 반발, 그리고 한미간의 이견 표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 불허로 흐르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 역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내년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소가 완공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지연이 불가피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가 완료되는 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갈 절박한 상황이다.

#### (1)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 미사일 수출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9.11 테러이후에도 이러한 미사일 수출을 늘려왔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이 가운데 일부를 또 수출하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선 부시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해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적절한' 보상만 이뤄질 경우 미사일 수출을 기꺼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혀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기본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한 '외화 벌이용'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다. 이는 CIA 보고서를 비롯한 미국 정부측의 문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의 배경이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것은 북한의 '주권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손실 및 주권의 제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우려를 씻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테러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심'이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미사일협상에서 초기에는 수출 포기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식량 및 에너지 등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안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확산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재원 확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가슴아파하는 북한의 인도

5) William Safire, To Fight Freedom's Fight, The New York Times, January 31, 2002.

주의적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북한은 이미 북미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약속은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 합의,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및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2001년 5월 유럽 대표단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 때 협상 내용에 기초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임할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측이 계속 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 미사일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및 동맹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MD 구축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이외의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MD 구축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이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 특히 북한의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북미간에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밝힌 것처럼 협상 타결의 '유망한 요소'가 있었다. 만약 부시 행정부는 전임 정부 때의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3)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1994년 10월에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미관계의 기본틀(Agreed 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조기 핵사찰 수용을 계속 주장해 온 미국과 이에 대해 수용 불가로 맞서며 역으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온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또다시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는 현재 북-미 양국이 주장하는, 경수로 완공연도의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라든지 조기 핵사찰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다. 그러므로 양국은 서로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한미일의 전력 보상을 교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타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전에 북한에게 약속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전력지원을 경수로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의 '한 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남한의 대북전력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북전력지원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일의 대체전력지원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전력지원을 제네바 합의 '밖'의 사업이 아닌, 이미 차질이 생긴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접근할 경우,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서도 여전히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4) 그 밖의 문제들

부시 행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이외에도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등 사실상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접근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지만, 부시 행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를 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화학무기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경우, 그 위협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미일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북한의 화학무기가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경우 화학무기 위협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위협 감소의 과정에서 북한을 CWC에 가입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물무기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이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서 본격적인 '제조 및 생산 단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회원국인 만큼 다자주의적 접근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해 다자간 문제해결 방식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미연합전력은 물론 남한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 및 준비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감축(혹은 철수)과 함께 논의할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문제, 특히 북한의 안보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비전이 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문제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

## < 토론 1 >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평화군축운동의 여성주의적 모색

김 귀 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부원장, 경북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9·11은 미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의 중심부에 대한, (비대칭을 세계의) 증오와 원한의 마그마로 변한 적대자로부터의 공격이고, 그것은 그 자체가 인과적인 보복의 의미를 갖는다.…… 그 전망대가 ‘Top of the World’라는 별명을 갖는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현대의 바벨탑의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석범, “세계를 뒤덮는 아프가니스탄 폭격” 중에서

### 1. 머리말

9·11은 평화의 미몽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의식을 깨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전쟁, 소위 ‘정의의 전쟁’은 세계인들에게 미국이 말하는 ‘정의’나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반테러 전쟁과 함께 2001년 1월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한반도적 사고에 갇힌 감이 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세계 사회의 문제와 동북아, 한반도(남북을 아울러 사용), 한국의 문제를 연관지어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계에서도 9·11이래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전후로 한 여성단체들의 연대상과는 자못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1)</sup>

이 글에서는 우선 9·11이후 -9·11과 악의 축 발언 시기로 구분- 국내 여성들이 평화운동에서 보여준 활동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활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 2. 9·11이후 국내 여성 평화운동의 특징

#### 1) 9·11 활동 특징

- 신속한 국내외 여성의 반전 연대 활동 및 구호 활동 전개 :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결성하여 25개 단체<sup>2)</sup> 합류
- 약자의 전쟁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여 아프간 난민에 대한 구호 활동이 미력하나마 있었음.

1) 통일운동에 참여한 여성단체로는 보수-진보를 아울러 통일이나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이 있는 통일연대 소속 여성 단체들이나 민화협 소속 여성 단체들이 망라되었다. 반면 9·11이래로 반전 행동에 참가한 여성단체로는, 민화협 소속 단체 중 상당수 이 문제에서 빠져 여연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과 함께 평소에 평화문제나 여성 인권에 보다 관심을 가졌던 ‘평화어머니회’와 같은 단체가 동참하여, 어느때 보다 열띤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2) 기독교민회, 경기여성연대, 대구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평화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전여대협 등을 포함하여 그것이 결성되었다. 단 25개 단체가 9·11이후 참가한 전체 여성단체들을 아우른 것은 아니다.

- 각 여성단체 연합하여 1인 릴레이시위 전개, 공개토론회(2001.11.13) 및 행진캠페인, 전쟁반대 평화 실현 범국민서명운동<sup>3)</sup>(5만여 명 서명, 미대사관 전달), 아프간난민지원 모금운동, 반전콘서트(12.24, 25), 평화여성회와 오마이뉴스 합동 ‘평화쪽지 날리기’(9. 16부터 2001년 말까지 4,800여건)
- 9·11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론의 공감대 형성 부족 : 미국과 아프간에 대한 양시양비론적 인식과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공존과 갈등, 전쟁 공포감의 기저

### 2) ‘악의 축’ 활동 특징

- 공감대 : 신자유주의 문제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 문제의 우리화(민족, 계급, 약자, 여성 등)
- 인식론 : 동북아 및 세계 질서 재편의 문제/미국내 정치경제적 갈등과 전략의 문제의 양 축 동요
- 미국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부각, ‘악의 축’ 발언의 성격과 본질 파악에 대한 진지한 토론. FX 사업을 둘러싼 평가와 여성주의적 시각의 결합
- 9·11로 만들어진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중심으로 한 부시 미대통령 방한을 전후한 맹렬한 활동상
- 여성단체 중심의 기자회견, 전체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 1인 릴레이 시위, 평화여성회 주도, 여연 소속의 여성단체들의 참여로 평화쪽지 날리기 재개(2001년에 비해 비주력활동), 국제 여성 평화 단체 연대 활동<sup>4)</sup>, 기타 문화행사(반전콘서트, 평화바자행사 등)
- 활동에 대한 평가 - 9·11 당시에 선전전에 주력했다면, 악의 축 당시에는 집회, 시위 등과 같은 활동에 주력. 반면 전 시기에 비해 이 시기에는 소규모 여성 단체들이 참여하여 여성운동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함.

### 3) 전체적 평가

- 여성의 평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상대적으로 열띤 활약상 : 미국과 초국적 금융 및 군수산업, 신자유주의, 주한미군, SOFA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제기.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체제로서의 국가폭력에 대한 인식의 암묵적 동의와 국가 또는 민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착종
- 여성주의와 전쟁과 평화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여성안보의 긴장, 국가와 민족, 여성과 인권 축간의 갈등
- 평화의 코드와 통일의 코드의 갈등 인식 제기 : 한반도 전쟁 반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차이. 평화운동의 과제 및 전망과도 관련
- 여성의 평화운동 관심과 참여에 대한 대중화 가능성과 여성 대중, 여성 단체의 전반적인 소극적 태도

### 3. 향후 활동 방향과 과제

3) 이 서명운동은 여성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음.

4) 특히 이 시기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는 관련 성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반전 평화단체, 여성단체들에 보내어 수많은 단체들 및 개인들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고 국제 연대를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 1) 평화운동의 조직화, 대중화, 일상화

- 평화운동의 정치화, 부문운동들간의 연관성 고양, 정확한 정세 평가 및 대소 단위의 토론회 개최
- 의제 개발 및 문제의식의 공감대 형성 및 확대 노력
-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반도적 특수성을 담은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꾸준한 개발과 선전 전; 이벤트와 조직화, 대중화 사업의 결합
- 평화군축운동에 대해 여성(약자)이 주체로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하고 제도, 비제도적 수준에서 채택하도록 제기
- 삶의 문제에서부터 평화/비평화의 문제 제기

### 2) 평화군축운동의 한반도 문제로의 인식

- 한반도에 국한되어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던 인식들을 지양하고 동북아, 세계 평화의 문제와 통일문제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국제 연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대 운동 전개 “진정한 애국주의가 진정한 국제주의이다”
- 특히 9·11과 그 이후는 세계 여성들간에는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sisterhood 정신을 살리는 계기가 됨.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세계 다른 지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과 연대만이 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외 법제화 운동; 통일과 평화의 기본 조약 성격

### 3) 평화의 코드와 통일의 코드에 대한 공통성의 연대

- 열린 민족주의 시각과 평화주의의 역사·사회적 시각간의 교감, 운동 세력들간의 교감

### 4) 이원론의 극복 과제

- 남성=주체, 문명, 전쟁, 가해자/ 여성=타자, 비문명, 돌봄·평화, 피해자 등의 이원론적인 구분법의 극복과 여성주의적 논리의 확산과 공감
- 전체 운동과의 연대와 자율의 축에 대한 적절한 교감
- 여성 단체의 기존 여성운동과 평화운동<sup>5)</sup>의 공감대 확산, 관심 및 활동 제고 : 지속적 여여대화

5) 여성단체 내에는 여전히 평화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여성운동과 통일운동을 구분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자기 단체의 주력, 핵심 사업과 그에 기반한 운동을 통일운동과 별개로 구분하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 < 토론 > 미국 반대와 평화운동

- 부시 정권의 전쟁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

김 승 국 (평화 활동가)

\* 이 글에서 말하는 '미국 반대' 는, 주로 부시 정권의 전쟁지향적인 대외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미국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 1. 평통사의 활동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는 2001년 2월 20일에 열린 제6차 정기총회에서 2001년의 사업기조를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병행하여 실천한다는 창립 당시 표방했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2001년부터는 평화군축 사업을 평통사의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축으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결합시켜 나간다”로 설정하고, “2001년은 평화군축 사업의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추고 다양한 대중사업들을 개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쌓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평통사는 대형 공격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도입 저지 투쟁을 즐기치게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등 사회운동단체로서는 최초의 무기도입 저지 투쟁을 벌임으로써 평화군축 운동에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01년도에는 토론회 등의 연례적인 실천 범주를 뛰어넘어 사회운동단체 최초로 '에어쇼'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파병반대 등 반전평화 실현 촉구 집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평화군축, 평화실현 운동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기 연례 토론회나 공청회, 제5회 평화아카데미를 장기적인 국방전략과 국방중기계획, 군산복합체들의 동향과 한국의 무기시장 등을 주제로 하여 개최함으로써 사회운동단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를 일정에 올려놓았다.

한편 조직적 측면에서는 전북 평통사가 지방단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활발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 확대에 성공한 것과 서울에서 평화분회와 통일분회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통사의 활동 강화와 조직적 토대 강화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군축 사업의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추고 다양한 대중사업들을 개발, 전개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쌓도록 한다”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전문 연구 역량이 미흡하며, 다양한 대중사업을 고안해 내고 이를 안정적,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실무력의 담보가 쉽지 않았으며, 조직적 토대가 이 투쟁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위력적인 대중활동을 전개하는 데 많은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2002년에는 2001년도의 무기도입 저지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평화군축 투쟁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담보해 줄 조직적 토대의 강화에 힘쓰으로써 전문 평화군축운동 단체로서의 평통사의 역할을 한 단계 높여내야 할 것이다.

### 2. 부시의 방한과 평화운동의 과제

옛날엔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악의 축' 발언이 나오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미국 본토의 평화(Pax Americana)를 겨냥한 '악의 축' 발언은 한반도의 전쟁을 예약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 자체가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반 테러 전쟁의 명분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서두르는 게 가장 큰 모순이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부시의 전쟁확대 정책과 햇볕정책의 조율이었다. 그나마 명백을 유지해오던 햇볕정책이 부시의 전쟁정책에 기선을 제압 당하면, 미국 강경파의 '악의 축' 발상과 남한 수구집단의 '북한 주적론' 이 한 몸이 되어 전쟁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 냉전·수구 동맹' 이 원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

2002년의 국운을 결정지을 양대 선거와 월드컵 축구대회장 위에 전쟁의 구름이 뒤덮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김 대중 정부에 있다. 김 대중 대통령이 애매한 햇볕정책의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부시의 전쟁정책에 과감하게 맞설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부시의 방한 목적 중 하나가 보잉사의 F-15K 판매에 있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한물 간 F-15를 미국의 강압에 따라 사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전투기가 북녘의 무고한 동포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의제는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문제이었다.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의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조·미 커뮤니케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면 끝난다. 그런데 선언을 회피하는 까닭은 이렇다. 첫째,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위협론을 빙자하여 미사일 방어망(MD)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위협론을 부풀릴수록 한국정부에 북한 협공용 첨단무기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기설은, 으름 '악의 축' 인 미국과 '사이비 강대국' 인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반영한다. 생존을 위해 고슴도치처럼 핵개발 선택권을 보유하려는 북한의 정권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통해 군·산 복합체를 비롯한 미국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부시 정권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틈바구니에 끼인 김 대중 정권이 설 땅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 이런 정세의 뒤영킴에서 민족의 평화로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부시 정권 등장 이후 '북한 죽이기' 의 일방주의 외교가 전쟁을 촉발할 경우 민족의 공멸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부시의 방한을 규탄·반대한 이유는, 그의 전쟁확산 정책이 민족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통일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프간 전쟁의 승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 전쟁 위기설의 여운이 남아 있다. 이 때 비무장 지대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 부시의 전쟁 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부시 정권에겐 한낱 정책일지 모르나, 우리에게엔 민족이 공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의 최종 결정권, 전쟁과 결부된 민족의 생사 여탈권을 부시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이 거래의 비극이다.

따라서 전쟁이 초래할 민족의 비극을 마감하기 위해 한·미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먼저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계획을 숙의하면서 한국 정부와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는 게 혈맹관계인지 미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도움을 주어야지 전쟁의 불쏘시개를 던지면 안 된다. 한·미 동맹관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못한다면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혈맹관계의 주술에 넋을 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쟁계획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보다 심각한 일이 있으랴.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안보를 위탁한 결과 미국 마음대로 전쟁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뼈아픈 반성을 요구한다. 민초들의 전쟁 위기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을 뿐 전쟁의 불씨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정치세력이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미국의 눈치만 살피니 한심한 노릇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 이라는 신화만 맹신하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세의 흐름에 민감한 국민들은 정부의 햇볕정책이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켜보

며 매우 불안한 심정이다. 한편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꽤 많은 국민들은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며 느긋한 표정이다. 그들은,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으로 믿는 모양인데 반드시 그럴까? 부시가 이끄는 미국이 국익증진(미국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래도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력인가? 혹시 미군이 전쟁 도발자로 둔갑할 가능성은 없는가? 주한미군에 민족의 생명을 맡길 수 있나? 혹시 주한미군에게 민족의 생명이 저당 잡힌 게 아닌가?

제2의 한국전쟁을 꿈꾸는 미국의 호전세력이 지키려는 것은 미국의 자본이며 미군의 생명이다. 이 점을 재빨리 깨닫고 전쟁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전쟁 불감증은 평화 불감증을 낳는다. 전쟁 증후군에 찌든 대중의 의식이 교정되어야 평화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다.

### 3. 반미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 제기

#### <반미 관련 풍경 1>

부시 방한 기간 중 대중들이 보여준 반미 정서는 놀라운 것이었다. 필자가 지적한 대중의 전쟁불감증은 기우에 불과했다. 겨울철 올림픽의 '오노 사건' 에 탕분한 대중들의 분노가 반미 정서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반미' 는 하나의 정서(pathos)이다. 그러나 9·11 사태-아프간 보복 전쟁-북한 등에 대한 아프간 전쟁 확대 움직임- '악의 축' 발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체득한 미국 비판력이 반미 정서의 바탕에 흐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반미 정서 안에 논리(logos)가 들어 있다.

대중들의 반미감정은 추상적이 아니었다. 이른바 운동권이 추상적인 구호를 내걸고 반미-전쟁 반대운동을 전개한데 반하여 대중들은 F-15K를 반미감정의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구체적인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부시의 방한을 복잡하게 설명할 때, 대중들은 단 한마디로 '부시가 한국에 F-15K 팔러오는 게야' 라고 일갈했다. 이토록 단순명쾌한 대중들의 정세분석에 따라 올해의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 <반미 관련 풍경 2>

9·11 사태-아프간 전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차원의 전쟁국면에서 전세계의 평화운동 세력은 '테러도 반대하고 아프간 전쟁도 반대한다' 는 양비론에 입각하여 운동을 전개했다(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런 양비론의 한계로 인하여 운동의 동력이 떨어졌다. 전쟁광 부시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와 지는데 반하여 운동권의 칼날은 상대적으로 무디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

부시가 방한 기간 중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 운동권의 전쟁반대-부시 반대-미국 반대의 열기가 냉각된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 의지가 녹어지지 않는 현시점에서 반미운동이 아직도 몇몇 단체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 <반미 관련 풍경 3>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NGO들이 반미운동에 소극적이다. 부시 방한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단체들도 미국 정부의 전쟁정책을 비판하지만 반미운동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반미운동에 주력하는 단체나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선을 그어 분리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상당수의 NGO

나 활동가들이 반미운동을 경원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중들의 반미 정서는 고조되는데 운동권은 반미운동을 경원시하는 경향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대중보다 한발 앞서서 시대를 이끌어가야하는 시민사회 운동 세력이 오히려 미국 비판의 직관력과 미국 반대의 과녁 설정(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F-15K·맥도날드 햄버거를 과녁으로 삼아 불매운동을 벌임) 능력이 뒤지는 현상(맥도날드 불매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된 다음에 운동단체들이 늦깎이로 운동을 전개하려함)을 어떻게 변호해야하나?

#### 4. 2002년 평화운동의 전망

‘평화의 맹인’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 따라서 우리는 2002년을 ‘평화의 해’로 선포하고 부시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벌이면 된다. 단순무지한 부시의 외교·안보정책이 추구하는 전쟁 놀이를, 대뜸 평화의 축제로 바꾸면 평화운동의 방향이 저절로 나온다. 부시의 노선이 노골적으로 전쟁 지향적이므로,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길을 찾으면 평화운동의 명답이 나온다는 말이다.

부시의 전쟁 지향적인 발언을 정반대로 뒤집어 운동의 구호로 삼으면 된다. 부시의 전쟁 노선이 단순 명쾌하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평화운동 세력의 노선도 단순 명쾌해진다. 부시의 전쟁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반전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부시 정권이 말하는 것을 즉자적으로 부정하면 된다. 이런 ‘부정의 평화운동’은 운동 노선을 에워싼 복잡성을 배제한다.

#### Pax Koreana의 원년으로

대중들의 ‘반미’ 표적인 F-15K 불매운동을 선봉장으로 삼아 올해의 평화운동을 질적으로 높여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Pax Americana(미국의 힘에 의한 세계 평정)’에 맞서는 ‘Pax Koreana(한반도 민중의 힘에 의한 평화통일)’ 전선을 구축해야한다.

올해를 ‘Pax Koreana’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운동 항목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운동 일정을 설명하면, 1/4분기에는 F-15K 불매운동, 2/4분기는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드는 캠페인, 3/4분기에는 미국의 북한 핵사찰 소동(제네바 협정 폐기)-전쟁위기 고조(9월 위기설)에 썩기박기, 4/4분기에는 ‘부시-고이즈미-이회창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콤비’를 만들기 위한 전쟁위기 책동(대통령 선거 판에 전쟁 구름 덮기) 파탄내기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 5. 맺는 말

올해는 민족·국가·시민사회의 장래를 결정지을 굵직한 행사가 열린다. 남쪽에서는 월드컵 축구·두 차례 선거가, 북쪽에서는 아리랑 축전이 개최된다. 이 모든 행사가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민족·국가·시민사회의 진운이 열린다. 따라서 이들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 전쟁의 먹구름이 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시 정권은 아직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숨 가쁜 정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정세를 타고 넘어야하는 평화운동 세력은, 전쟁 지향적인 부시 정권의 고삐를 쥐고 ‘평화 대행진’을 해야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아직도 젓먹이인 평화운동 세력에게 이런 역사적 임무는 과중한 느낌이다. 그러나 올해를 ‘Pax Koreana’의 원년으로 삼아 평화운동의 대중화에 주력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

### < 토론 >

김혜애 (녹색연합 실장)

## < 토론 4 >

박 세 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

## <전체토론 4> 미국패권과 한반도평화

· 최근 전쟁국면 이후 미국의 세계패권방향을 전망,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평화군축운동과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 모색

- 사회 : 손 혁 재 (삼어연대)
- 발제 (각 10분)
  1. 민중적 접근의 쟁점 소개 - 정대연(전국연합)
  2. 시민적 접근의 쟁점 소개 - 정대화(교수노조)
- 토론 : 김태일(민주노총) / 이종희(진보네트워크) / 남윤인순(여연) / 서주원(환경연합)
- 10분 휴식
- 청중토론(1시간 50분)

## < 발제 1 > 민중적 접근의 쟁점 소개

정 대 연 (전국연합)

## < 발제 2 > 2002년 권력교체기의 상황인식과 쟁점

정 대 화 (교수노조 조직실장, 상지대 정치학)

### 1. 문제의식

해방 후 한국사회의 누적된 모순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배경에 국제적 냉전구조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근원적인 동력으로 한국사회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여기서 분단과 대결의 정치, 이념적 편향의 극우보수정치, 군부정치가 태동했다.

이러한 모순구조는 국가와 사회의 형성원리의 측면에서 국민 혹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군림과 억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생기의 서구에서의 국가형성이 시민사회에 의한 근대국가의 형성이라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자유주의적인 사회계약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든 맑스주의의 자본주의국가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든 서구의 근대국가는 시민사회 혹은 더 좁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지에 의해 아래로부터 건설되었다). 오히려 일정한 역사적 뒤틀림 현상을 배경으로 먼저 형성된 국가가 부르주아지를 육성하고 시민사회를 창출하는 기형적인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 혹은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익의 조절기체로서의 정치는 처음부터 그러한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민간독재와 군사독재의 반복이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붕괴된 민주공화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은 '가상의' 민주공화국일 뿐 실상은 왕조적 봉건국가였으며, 권력자만의 '나홀로' 민주공화국이자 주인을 노예되게 하는 '허구의' 민주공화국이었다. 이 붕괴된 민주공화국이 '총체적 부패공화국'(ROTC)으로 타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민주적 주권개념도 없고, 합리적 절차와 규범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없는 상태에서 부패와 편법과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창궐하는 그런 타락한 사회였다.

한국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은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사회운동은 궁극적으로 근대 한국에 깊이 각인된 모순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최근의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힘으로, 특히 광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민주화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물인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그 이후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그 각각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사회운동의 반영이자 민주화의 일부로서 평가받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은 이러한 민주적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2002년 권력교체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대립구도는 80년대 이후의 민주적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80년대 이후의 흐름을 이어받아 개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그 이전의 사회적 작동원리인 수구보수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전환기적인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적·법률적 절차이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대통령만 선출하는 장치는 아니다. 대통령 선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결정되는 포괄적인 장치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선출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념적 정책적 기조의 결정, 임기 동안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함께 할 사회세력의 결정, 대통령과 지지세력이 선호하는 정책방향의 결정 등 수많은

은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누가 누구와 함께 이 과정을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선거를 통한 권력교체' 과정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대통령선거가 자칫 보수세력들간의 권력투쟁으로 축소 전개되면서 민주화와 개혁의 승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개혁세력의 입지가 취약하고 민중 및 진보세력의 입지가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정치의 진보적 발전이 제약당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어렵게 승계되어 온 민주화와 개혁의 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를 9개월 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판단할 때 현 상황이 큰 변동없이 연장되어 수구보수적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앞의 우려가 급격하게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70-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 통일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했던 '역사적 세력'으로서의 민주개혁세력이 선거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권력교체기 상황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힘을 모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권력교체기의 상황인식과 쟁점, 그리고 몇 가지 대응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 2. 2002년 권력교체기를 앞둔 정치사회적 상황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지난 1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총노선은 민주화와 개혁이었으며, 이 노선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적으로 승계되어 왔고, 이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이 발전과정은 대통령직선제 도입, 문민정부의 탈군사화와 정치개혁, 국민의 정부의 재벌개혁으로 전개되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한다면,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와 개혁은 대통령직선제 도입으로 국민에 의해 정권의 정통성이 부여되고 강경군사정권이 온건군사정권으로 변화된 것,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완전한 탈군사화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정개혁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이 실시된 것,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재벌개혁 등 사회경제적 개혁이 추진된 것 등의 차례로 발전적으로 승계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김영삼 문민정부의 역사적 업적인 탈군사화의 성공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재벌개혁을 뼈대로 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연결됨으로써 개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정부의 등장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역사발전의 맥락에서 순기능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같은 시기에 민주화를 추진한 제3세계 국가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이후 민주화와 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교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성숙은 70년대와 80년대 중후반까지의 통합적인 재야민주화운동이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정당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등으로 분화 발전하면서 두드러졌으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의 발전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 결과 국가의 '강력함'은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억압성'은 부분적으로 교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30년 군사정권 종식과 탈군사화의 평화적 완수, 정경유착구조 해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의 일부를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군사정권 아래서 지배계급의 최상층에서 군림하던 군부를 병영으로 복귀시킨 문민정부의 업적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하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 또한 문민정부의 업적이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바탕으로 선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시작된 문민통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로,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을 수정하고자 한 것은 김대중정부의 역사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재벌개혁이 완수된 것은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권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의의를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뒤늦게 시작되어 논란중이지만 언론개혁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분단체제에 파열구를 낸 것 역시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역사적 업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 언론개혁,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작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개혁의 발전적 승계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광주항쟁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기억, 6월민주항쟁에서 실현한 최대민주화연합의 경험과 일정한 승리를 통해 얻은 자신감,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영향과 성공적인 탈군사화의 효과, 그리고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민주적 성과가 누적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역사-구조적인 측면에서 민주화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배경에는 권력 내부적으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운영의 경험부족과 정치적 취약성에 기인한 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 후반기의 혼란이나 난맥상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김대중정권 후반기의 국정 난맥상과 개혁노선의 좌초는 권력 내부의 문제점과 함께 원동력의 경향적 쇠퇴라는 역사-구조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권력 내부에서 드러난 개혁구심의 취약성과 권력부패 등 도덕성 문제가 상황을 급격하게 반전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월민주항쟁으로 형성된 사회적 총노선인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통일의 노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처한 김대중정부의 상황이 후퇴의 가능성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여·야간 수평적, 평화적, 민주적 정권교체를 통해 정치민주화와 정치발전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였으며, 그 결과 상당히 개혁적인 국정운영과 심화된 개혁작업이 기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개혁과 변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반면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계획조차 시작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김대중정부는 정치발전의 제도화(정당, 선거, 국회의 개혁), 지역감정 해소와 인사문제 해결, 구조조정, 핵심적인 개혁과제의 추진 등에서 많은 한계를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정치분야에서 DJP연합과 퇴행적 정치방식의 차용으로 개혁의 의미를 크게 후퇴시켰다.

집권 후반기의 시점에서 문민정부의 후반기와 비교해 볼 때,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정치사회적 대립구조는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혁세력의 저항 → 보수언론의 보도와 사회적 쟁점화 → 수구세력의 저항 →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의 팽팽한 대립 → 정부의 조절능력 상실 → 개혁의 좌절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조절능력 상실은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개혁구심의 부재 및 권력형 부정부패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한 도덕성의 실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전에 부각되었던 고급옷 로비 사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게이트', 대통령의 아들과 아·태재단의 부적절한 처신 등은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정권의 실정을 계기로 수구보수세력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정치사회적 연합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연합이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수구보수세력들 사이의 선거연합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 양·질적 성장을 계속해온 민주적, 개혁적, 시민적 세력과 반공주의, 군사주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수구보수·기득권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동반하는 교착상태가 형성되었다. 특히, 앞의 민주개혁세력들이 일정하게 정체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후자의 세력이 맹렬하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87년 이후 지속되어 온 민주화의 개혁의 발전적 흐름이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 권력교체기를 정점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단구조, 지역대결구조, 재벌체제의 개혁이 좌절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작년 10·25 재보선 이후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민주당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진행된 국민경선제가 상당한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당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정당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개혁이 총재직 폐지, 대통령후보의 국민경선, 총재와 대통령의 분리 등 '제왕적' 대통령과 총재에 대한 거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쫓고 개혁적인 정치지도자들이 추동하고 있어 3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도력과 새로운 정치구조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2002년 대통령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기는 정치·사회적 변화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선거가 국민주권과 시민권의 신장, 민주화와 개혁 및 민족통일의 추진을 둘러싼 세세력들 사이의 건곤일척의 대결장이자 이를 계기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권력교체기의 평가와 전망

김대중정부 후반기의 상황과 정치적 대립구도의 성격을 동시에 감안할 때 권력교체기의 상황과 구도는 일차적으로 민주당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상당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의 상황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인물과 노선 등 여러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한나라당의 선택은 이회창 1인과 보수노선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권력교체기의 상반기에 예상되는 변수는 두 가지이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에서 개혁적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보수적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박근혜 전 부총재가 신당 창당에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대선 경선 이후 이인제 주도하에 이인제와 노무현의 양자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인제의 대세론과 노무현의 대안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결구도에서 결론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대세론의 일방적 우위구조가 깨어지면서 노무현의 대안론이 급격하게 힘을 얻어가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가 영남 출신인 노무현을 선택하는가 하면 최근 방송사들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이 이회창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이인제와 개혁적인 노무현의 선택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이 보수노선과 개혁노선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선택을 한나라당의 상황과 접합하면 대통령선거는 민주당, 한나라당, 신당, 민주노동당(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다자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자대결에 신당이 개입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한나라당과 신당은 원칙적으로 보수노선을 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인제의 보수노선을 선택할 경우 대통령선거는 보수노선 일색의 대결구도

로 형성되는 반면 노무현의 개혁노선을 선택할 경우 개혁과 보수의 대결구도로 형성된다. 여기서 고려할 문제는 민주당이 보수노선을 선택할 경우 한나라당의 보수노선과 경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당의 정책 차원에서 민주당의 상대적 개혁성은 한나라당의 상대적 보수성과 크게 구별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에 따라 보수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개혁적인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을 상실하는 반면 보수층을 흡수하지는 못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수노선은 당내 개혁적인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미 보수세력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대결을 벌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수노선의 선택은 대통령선거를 지역대결구도로 몰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취약하다. 보수대결구도에서 유의미한 정책대결이 실종되면 남은 전략은 지역대결과 인신공격뿐이며, 이인제와 이회창의 양자대결은 97년 대통령선거의 경험으로 인해 강력한 지역대결과 상호비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두 인물의 출신지역의 차이와 더불어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인제의 탈당에서 비롯된 '이인제 학습효과'로 인해 이인제에 대한 영남의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권 내에서 노무현의 독특한 성격은 ①회창과의 대결에서 지역대결구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 ②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고른 득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 ③영남 유권자를 이회창과 분점할 수 있는 인물, ④민주화의 개혁의 노선에 가깝게 접근해 있는 인물, ⑤수도권에서 젊은층과 개혁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 ⑥사회적 개혁세력의 지지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인물, ⑦한나라당내 개혁세력의 이탈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인물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우려되는 지역대결구도와 보수대결구도를 최소화하여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개혁을 보장하는 동시에 분열된 정치사회적 개혁세력을 한 곳으로 묶어내어 이회창과 대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국민경선을 거치면서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후보 선택을 미지수로 한 상태에서 선거국면을 전망해보자. 대통령선거 국면에 개입될 변수는 크게 정치변수, 외부변수, 환경변수의 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변수로서, 세 가지가 예상된다. 우선, 지역주의가 금년 대통령선거를 좌우할 일차적인 변수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71년, 87년, 92년, 97년 대통령선거를 좌우한 핵심적인 정치변수는 지역주의였다. 지역대결구도가 선거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선거 역시 지역주의로 얼룩진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역주의의 양상이나 강도는 대결구도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며, 특별한 후보군의 조합에서는 지역주의가 최소화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사실상의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이 영남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 후보의 출신지역이 지역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후보가 영남지역과 대결하는 호남지역 출신일 경우 영호남 대결은 불을 본듯 명확해진다. 반면 영남출신 후보가 나올 경우 영호남 대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영남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으로 출신지역이 다를 경우 역시 지역내 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가 충청지역에 기반한 인물일 경우 영남과 충청지역의 차이 및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형성된 '이인제 효과' 때문에 지역감정의 촉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지역감정의 촉발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하는 후보간 정책과 노선의 차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적인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보수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자들의 정책은 보수적 대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정책적 차별성이 약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더욱 더 지역감정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보수와 개혁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호소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결정력이 약화된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경우 이미 보수노선을 명확하게 천명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정책대결구도를 결정하게 되는 셈인데, 이인제의 경우 보수대결을 유도하는 반면 노무현의 경우 보수와 개혁의 대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 등이 주도할 신당의 영향력이다. 현시점에서 신당의 주체세력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당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참여가 예상되는 인물군이나 자금력, 지지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떤 경우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능가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무소속 및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이탈자가 중심이 되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인물이 제한적이다. 상당한 폭의 정계개편이 없는 한 인물면에서는 취약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보다는 영남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노무현의 지지가 상승하면서 신당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로, 대통령선거에 개입될 외부변수는 남북관계와 미국 두 가지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최근까지 사상논쟁이나 '북풍'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사상논쟁이 부각되거나 '북풍'이 개입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그 파급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경선에서 이인제가 노무현에게 '파괴적 개혁주의자'라는 딱지붙이기를 시도했지만 사상논쟁이라 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특별히 효과적인 공세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반면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결정적이고 대단한 것이다. 최근 예상 후보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 대사와 면담하는 행위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활용해서 미국의 국익에 우호적인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부시정권의 등장이나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세계적인 차원의 반테러 정국은 한국의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아닌 한 미국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환경변수로는 일반적인 국민여론, 언론의 역할, 시민운동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국민여론은 선거 상황에서 형성된 국민적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여론은 정치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독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기도 한다. 물론 언론이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언론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의원총선거에서는 총선시민연대가 언론의 선거결정력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 역시 언론보도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적대적 대결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선거국면에서 언론의 정치적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과 언론의 '정언유착'이 논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시민운동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가변적이다. 시민운동이 정치적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일정한 수준에서 공정선거감시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되는 일이다. 게다가 과거처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민운동은 우리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된 선거자금을 감시함으로써 부패한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지역감정을 차단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국민경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전국연맹,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 15개 단체가 '대선감시시민운동부즈만'을 결성하여 경선자금을 감시하고 있다. 시민운동부즈만의 활동은 민주당 경선, 한나라당 경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을 거치면서 재평가되고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운동이 향후 선거국면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 권력교체기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선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나 역사적 진보를 선거와 무관하게 사고하는 반선거주의에 몰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적절히 통합되어야 하지만, 선거국면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과감하게 선거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국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표출되고 해결되는 만큼 선거공간은 사회적 공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가장 활성화된 사회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세력이든 민주세력이든, 민중세력이든 노동운동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모든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에서 획득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87년 대통령선거 이후 제도권의 개혁적인 인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후보가 정당의 지원없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독자출마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내걸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는 구별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운동과 달리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에서 독자적인 참여의 흐름이 강한 만큼 동일한 선거국면에서 나타나는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교체기에 개입할 시민사회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선거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우파진영은 물론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관련해 선거국면에 개입하게 될 노동·민중·진보진영의 역할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국적인 연대망의 구축이 가능하고 상당히 높은 시민적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개혁·민중진영과 연대하여 보수회귀 움직임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특별히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개혁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관련, 시민운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임기 5년 짜리의 '권력재창출'이나 '권력교체'와 같은 인물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개혁'을 재창출함으로써 민주화와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선거가 특정 정당이나 사회세력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민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거의 내용을 확보하고 외연을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선거가 특정 개인과 그를 둘러싼 특정 정치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세력들 사이의 대결로 확대되어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립성,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공익성, 그리고 가상의 정치공간에서 발휘하는 시민운동의 정치력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주의와 개혁이 정치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정치적 조건에서 시민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 등과 더불어 21세기 사회개혁의 핵심적 요소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노사관계와 사업장 영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반면 그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특수한 비서구적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개혁(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의 중요한 추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통로이자 국가에 대해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원칙적으로 성격이 구별되는 두 방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는, 위기에 직면한 민주화와 개혁의 노선을 시민사회에서 복원하여 대통령선거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전략'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발굴하여 집권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특수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민운동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별개의 단체가 별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며,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과 단체의 위상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민주당의 국민경선이나 박근혜의 탈당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특수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국면에서 시민운동은 개혁연합을 바탕으로 한 시민선거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구보수연합에 대응하는 폭넓은 개혁연합을 형성하여 조용하지만, 도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시민선거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민주화와 개혁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선거혁명이란 2002년 대통령선거가 폭넓은 국민적 지지, 탈지역주의, 21세기에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을 두루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축제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입된 제도상의 민주주의'(paper democracy)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수준을 '실질적인 민주주의'(actual democracy)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실천 가능한 시민선거혁명의 과제는 국민참여권운동, 선거감시운동, 지역감정해소운동, 제도개선운동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국민참여권운동에는 투표참여와 같은 일반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운동 등이 포함된다. 선거감시운동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약속, 선거운동조직에 대한 감시자 파견, 지역별 감시조직 결성, 중앙선관위 등과 공동으로 감시운동을 추진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지역감정해소운동 역시 후보자의 약속을 유도한 다음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행동과 발언을 감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운동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법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세탁방지법에서 삭제한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자금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가 누차 요구한 것처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단일계좌로 정치자금을 입출금하고, 30만원 이상의 자금사용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모든 지출에는 정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현행 선거법에서 복잡하게 나열하고 있는 선거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선거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벌이거나, 국민과 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거나, 선거운동 방법을 일일이 제시하는 것 등이 불필요해진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이고 특수한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 몇몇 시민운동단체는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준정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권 정당의 부실함과 진보적인 정당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는 한 시민운동은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영역에서 계급의 대표성보다는 국민의 대표성을 자임하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정당과 재벌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구보수에 대응하는 개혁과 진보의 방어막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이념적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국면에서 이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상 사회적 영역에서 형성된 그나마의 계급계층적 대립관계는 정치적 영역에서 더욱 불균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와 의석수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선거의 감시자를 자임하면서 지역감정 해소, 금권선거 차단, 국민참여권 확대, 선거법과 선거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5. 결 론 \*\*

## < 토론 1 > 2002년 양대 선거와 여성운동의 과제

남 윤 인 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 1. 선거국면과 여성운동의 대응전략

선거시기 여성운동은 크게 두 가지 전략에서 대응해왔다. 하나는 참가의 정치이고 둘째는 대안의 정치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리, 모순된 영역이기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여성운동이 매 선거시기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각기 분리된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9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연합은 지역에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해 온 여성지도자들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지원하여 당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여성의원들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성인지 의식이 분명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기존 정치질서를 변화시키는 대안의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기로 한 시민단체에서는 여성운동이 이번엔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운동이 참가의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또한 여성운동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의 정치를 통해 제도정치 영역으로 대안적 정치역량을 배출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참가의 정치는 일상의 정치를 기반으로 대안의 정치로 연계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현 선거시기 여성운동의 과제

#### (1) 일상의 정치활동 확대

현단계 지역여성운동은 지역을 단위로 육아, 환경, 교육, 교통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된 과제들은 개별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예산을 확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일상의 정치를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안의 정치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선거시기 여성운동의 과제는 열려진 정치공간에서 일상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역사회의 여성문제를 정책 의제화 하여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여성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물신적 투표행위를 변화시키는 여성주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여성연합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여성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다.(예, 러브호텔 건축허가 문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 보육조례,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여성폭력 예방활동, 보건소의 여성건강업무 확대, 여성의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확대 등) 또한 여성단체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조직을 통해 '여성의 선택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대통령선거시기에는 향후 5년 간 성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제대로 알고 찍자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여성공약비교, 여성관련 주요발언 모니터 후 비교평가,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운동이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과제가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족 내에서 정치토론을 주도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여성민주시민리더십 훈련 등을 준비해 나가고, 여성들이 돈 정치의 동원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성주권선언을 직능별, 지역별로 확산해 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2) 제도 개선 활동

여성의원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5.9%로 세계 179개국 중 96위(IPU, 2002)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똑같은 경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지방의원의 경우 이번 정당법 개정시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50% 여성할당을 지퍼식으로 도입했으나 비례대표 비율이 10%인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비례대표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선출직과 비례직의 비율이 1:1로 되었을 때 각각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당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의 경우 두 개 선거구에서 남녀 동수로 선출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기초의회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선출 : 비례=1:1)를 도입하고 그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의원 순번을 지퍼식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할당제를 실천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 지원시 20%를 삭감하고, 여성정치인 육성 차원에서 여성정치인 교육훈련비, 선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3. 대선시기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대선이 권력재편의 계기가 되려면 개혁세력이 연대하여 국민에게 가시적인 정치세력으로 접근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 개혁세력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치적 결집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선거국면에서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돈 정치, 지역주의, 인맥정치 구도를 깰 수 있는 시민감시운동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문화의 변화, 유권자의식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권력재편의 가능성은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통합되어 국민적인 수권정당으로 탄생한다면 특정 학맥과 인맥을 뛰어넘어 기존의 정치·사회적 기득권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

## < 토론 > 녹색이념의 실현을 위한 2002 양대선거 참여

서 주 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1. 현정부의 탄생과 부시의 등장

한국의 환경운동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성장제일주의 시대의 만연된 낡은 개발주의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의 차원에서 행해진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를 땅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엄청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난개발을 부추겼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IMF는 국가정책기조 전반을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경정책의 일정한 후퇴 내지는 유보를 초래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해양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 강행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1억평의 해제와 12개 댐건설 발표, 에너지, 교통 정책의 공급우선주의 등 전반적인 환경정책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 전부터 추진되어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구축이 IMF 이후 더욱 공고해지면서 현정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게 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환경의 세기라는 말에 걸맞게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려는 듯이 부시의 등장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인준거부, 화석연료와 핵연료 산업의 중흥, 군수산업의 이해를 대변하여 MD의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테러사태와 보복전쟁 그리고 한국의 파병 결정으로 반전 평화운동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책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그 동안 거대 개발사업들이 환경운동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겪어온 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운동진영과의 갈등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각종 실물지표의 상승, 양대선거로 인한 유동화폐의 증가,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효과의 발현 등 2002년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양대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의 공약화가 남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힘겹게 진행될 것이다.

### 2. 2002년 지방자치 선거

올해의 지방선거는 98년 지방자치선거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뤄질 전망이다. 중앙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대선을 눈앞에 둔 보수정당들과 보수정치인들의 세 모으기에 의한 힘 겨루기가 횡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2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후퇴하는 정부의 환경정책 발원장소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의 토호세력과 개발사업자의 유착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연대가 강하게 이루어져 생활정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

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고리를 깨지 않는 한 생활 속의 주민자치에 의한 녹색자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980년 일본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7개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청원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대표를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방의회에 진출시켰다. 이것이 카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이다. 이러한 예는 주로 여성들이 생활 속의 운동을 하다가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생활자 네트워크 등에 있다.

두 번째로는 보다 근본적인, 운동방향의 전환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대두와 오랜 환경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어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환경운동진영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다. 그로 인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분적인 참여와 정책내용의 점진적 변화가 있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내용의 부분적 변화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바꾸어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새만금 사업, 댐건설 및 핵발전소,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보듯, 정부의 환경정책은 후퇴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이 흐름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주요 국가 정책과 관련된 환경운동진영과 정부와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환경운동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환경운동진영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왔던 운동방식, 즉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대안운동(녹색정치)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지방자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조직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라는 특수한 공간에 일회적으로 참여하는 의미 이상인 것이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95년, 98년 선거를 통하여 녹색후보에 대한 실험을 한 바 있다. 특히 98년의 선거에서는 52명의 무소속 녹색후보를 내세워서 38명을 당선시킨 경험도 있다.

### 3. 녹색이념의 실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이미 녹색정치세력은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해 있고(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연정에 참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엘 고어의 패배원인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랄프 네이더의 선전 등) 규모와 활동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몽골, 대만, 홍콩, 호주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녹색정치는 세계정치의 큰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소수당이지만 몽골에서도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였고 올 4월에는 호주의 캔버라에서 세계 녹색당과 녹색인(The Greens) 수백 명이 모여 최초의 대회를 열었다. 세계 70여 개 국가에 모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 대회에서 국가를 넘어선 녹색이념에 관한 지구적 공동실천강령을 채택하는 등 다른 정치에서는 볼 수 없는 연대의 힘을 보여 주었다.

환경론자라고 알려져 있는 엘 고어를 낙선시키는데 일조 할만큼 랄프 네이더의 녹색이념이 기존의 정치이념과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녹색정치는 크게 4가지 지주(支柱, Four Pillars)적인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태주의(Ecolog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구현,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실현, 비폭력(Nonviolence) 평화 그것이이다.

생태주의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공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대간 평등까지도 포함한다. 사회적 정의의 구현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Gender Democracy), 인종, 성적 취향, 직업, 계급에 기반한 특권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비폭력, 평화운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간 개개인의 생활과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에 자신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와 자치, 분권과 자율을 중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치와 분권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녹색당은 지방자치를 중시한다. 녹색당의 건설 경로에 있어서도 중앙당의 우선적인 건설보다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수자 운동, 인권, 평화운동들의 발전과 자치의 실현, 연대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녹색이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결집체로서의 녹색당 건설은 우리의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 시기 우리가 대통령 선거보다 지자체 선거에 힘을 더 쏟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에서의 기존 정치집단과 다른 무소속 후보의 성공은 양당구도를 파열시킬 것이고, 새로운 정치이념과 정치집단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대통령선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선거의 참여와 연대를 위하여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전 민주화 과정에서의 독자 후보,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는 국민적 지지기반의 부족을 근거로 한 시기상조론이었고 이는 민주연합론으로 논리적 귀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에 대한 우려는 지지기반의 부족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더욱 주요하게는 시민사회단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의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도덕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제도정치활동을 선언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상식적 논쟁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금방 눈치채겠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 또한 우리의 선거참여와 정치세력화의 한계의 하나이다. 우리의 운동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일진대 정치적 의미를 사상시킨 순수성이나 무색무취한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순수성은 오히려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녹색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은 기존의 어떠한 정치이념과도 구분된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사회당도 포함될 뿐 아니라 자치 실현, 여성세력화를 실현하려는 세력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정치집단의 부도덕성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의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혼탁한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대단한 배려인 것 같지만 이러한 논리는 정치 기득권층의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방해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기존 정치인의 부도덕성 때문에 왜곡된 정치구조와 부패고리, 타락한 정치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사업들이 판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구조를 바꾸려는데 참여하지 말라니! 정치라는 공간은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권선거와 정치혐오증에서 국민을 탈피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로, 축제로 만들 때 가능하다. 총선연대의 경험에서처럼 국민의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승화시켜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대선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경선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전의 낙천,

낙선운동과 같은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대의 문제이다. 아직은 우리가 제도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으로 등장하기에 부족하고 우리의 이념을 완성(내용적으로나 인적, 물적 자원으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원칙이고, 그 첫 번째 원칙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녹색이념에 동의하는 집단과의 일차적 연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녹색후보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여성, 인권, 평화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둘째는 기존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 집단과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소속의 원칙이다.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녹색후보가 아닌 사람들은 이차적 연대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정치세력과의 연대의 문제인데 이는 사안별, 정책적, 선거연합적(선거구의 조정, 제한적 공동브랜드 사용 등) 연대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각각은 단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될 것이고 서로에게 힘을 보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다양성에 근거한 연대체의 구성과 참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양대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총선연대 방식은 유효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다양하게 참여방식을 논의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단일화는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조장할뿐더러 사업에 있어서도 무리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보수이념의 확산과 강화기조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본연의 개혁, 감시 임무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화 선언, 선거비용 옴부즈만, 부정선거 감시, 정책과 공약화, 정치관계법의 개정 노력, 지역주의의 배격(지역감정 문제의 해결)과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별 단체들의 독립적 다양성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 선거에의 참여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 자치연대, 그리고 지역의 수많은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선거 참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는 쉽게 점칠 수 없지만 최소한 98년의 선거보다는 진일보한 결과일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전반적으로 보수적 이념과 진영이 전반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행보가 어떠한지 하는 것은 각각의 정치적 이념과 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보정치의 실험장으로 이번 대선을 치루려는 진영이나 시민사회의 후퇴기조 속에서 정치적 중립화를 표방하여 선거라는 절차의 투명성을 이루려는 진영, 그리고 권력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만 정책과 공약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진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왜곡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다양성에 근거한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운동 속에서 연대라는 원리는 항상 빛을 발휘할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진지하고 사심 없는 논의 속에서, 그리고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 토론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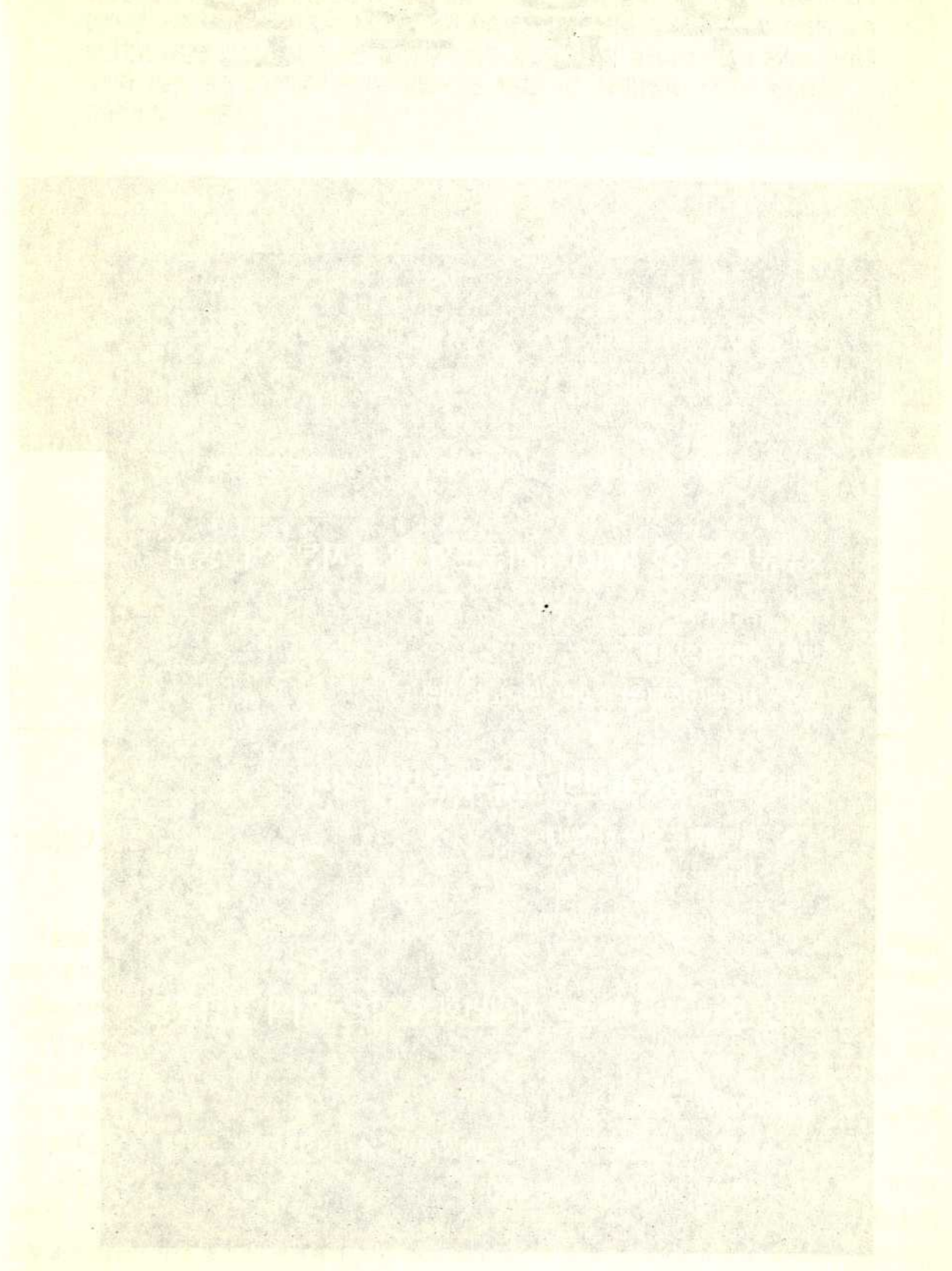
김태일 (민주노총)

Faint, illegible text in the left column of page 106.

Faint, illegible text in the right column of page 106.

< 토론 4 >

이종희 (진보네트워크)



# 부 문 토 론

## <부문토론 1> IMF 구조조정과 불안정노동자의 빈곤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 이수봉(민주노총) / 유병홍(민주노총)

토론 : 김신양(서울자활정보센터), 김재천(산재노협),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문토론 2> WTO 뉴라운드와 한국 자본주의, 농업

주관 : 농협희생연대(준)

발제 : 박진도(총남대)

토론 : 서형원(환경연합), 농어연, 민주노총, 여연 등

## <부문토론 3> 표현의 자유와 진보의 정치

주관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발제 : 강내희(문화연대)

토론 : 장여경(진보넷), 안성배(민예총) 등

## <부문토론 4> 새로운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환경운동

주관 : 환경운동연합

발제 : 이시재(환경운동연합)

토론 :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문순홍(바람과물연구소), 이희수(민주노총),

이태호(참여연대), 홍성태(민교협)

## <부문토론 1> IMF 구조조정과 불안정노동자의 빈곤

· 취지 : 1980년대 이후 세계화된 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한국도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경제위기와 함께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0년 이후 실업률이 줄어들어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에서 자취를 잃어졌으나 실제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중장년 장기실업자, 청소년 실업자층의 적체 등으로 여전히 실업과 빈곤층의 문제는 심각하다.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실업·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과 사회운동 세력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주관 단체 : 민주노총

· 발제

1.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 이수봉(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2. 사회적 약자? 소득격차? 노동운동의 역할!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토론 : 김신양(서울자활정보센터), 김재천(산재노협 사무국장),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체토론

## <발제 1>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업정책을 중심으로 -

이 수 봉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기존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시장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가족 속에서, 그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연 10%에 달하는 고도성장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IMF 사태 이후로 시장과 기업의 복지공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한계가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편으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불안에 조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으로 강력한 IMF의 주문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용어의 변화에서 보듯이 기존에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빈곤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기대나 홍보는 잘못된 것이다. 이 제도는 전근대적 비공식 복지에서 겨우 근대적 복지의 형태를 띠었을 뿐이다. 말 그대로,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했을 뿐이고 성장의 신화가 끝난 개발도상국 자본주의가 당연히 채택해야 하는 필수 안전망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안전



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난 용어의 변화와 그 실제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분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각종 재산규정이나 부양의 무자규정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마저도 생계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예산에 수급대상자를 맞추는 종래의 생활보호법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보충급여 방식을 통해 충분한 생계보호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음에도, 의료보호에는 여전히 1·2종 구분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상자 성격이나 자활프로그램의 실효성 등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제도도입 당시 시민단체와 정부의 동상이몽으로 인해, 자활사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종전 생활보호법에 비해서도 선정기준이 더 강화되고 엄격해졌다. 그 결과 현재도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사각지대가 '차상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1~2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적게 책정됨으로써,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가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가 안 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적으로 간편한 측면이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포함될 요소를 모두 보호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 급여를 모두 묶어 둠으로써, 수혜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즉, 대상자 확대가 제도운영에 과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각 급여의 성격상 기준이 달라야 하지만, 동일한 급여 기준에 의해 운용되는 문제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식료품비를 지원해야 되는 기준과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직 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수급자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충실한 사례관리와 자활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원확충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구조조정 이후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구조조정 여파로 전담공무원 채용 지연되고, 단기간에 대폭적인 인력확충에 따른 수준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전달체계 강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토대에서부터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요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파악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수급자 개개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 2. 실업정책의 문제점

### □ 실업통계의 문제점

정부는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 양적인 축소에만 급급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등 고용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는데도 고성장시대의 단순 실업률 통계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실업자 정의는 최근 1주일 이내 구직활동을 한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협소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으로 실적해 사실상 실업상태이더라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취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현재는 구직을 단념한 상태에서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실망실업자의 경우도 모두 실업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노동시장을 반영한 통계지표를 개발해 탄력적 실업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정부 실업대책의 기초는 실업상황에 대한 기존 인식을 극복하지 못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최근 발표한 보완정책 역시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흡수력의 제고와 그 과정까지의 한시적 실업정책의 시행을 기초로 실업정책을 시행한다는 기초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국내경기에 대한 막연한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실업문제의 원인을 실업자들의 취약한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교육을, 중·장년 실업자들에게는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안일한 기존 인식을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 □ 전달체계의 불안정

- 상담인력을 타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에 비해 3배 독일에 비해 26배 부족한 실정이다.
- 직업상담원 1인당 민원인 상담시간은 평균 10분 이내로서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 현재 심층상담이나 직업지도, 취업강좌, 진로상담 등의 질높은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무별 담당인력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등 업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발생하고 있다.

< 표1 > 주요국가의 PES인력의 비교

구 분	영국(1999년)	독일(2000년)	스웨덴(1997년)	일본(1997년)	한국(2001년)
기관수	1,100	852	570	619	187
직원수	35,922	85,840	11,000	15,320	2,596
직원1인당 근로자수	745	394	325	3,401	8,506

\* 자료출처 : ILO,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2001, p.30

### □ 상담원의 불안정

- 상담원의 80% 이상이 이직할 의사가 있어 이들의 신분상 불안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직의 사유로는 고용불안과 보수 및 승진체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현재도 PES의 예산이 정부의 일반회계로 되어있고 상담원 대다수가 임시계약직으로 되어있어 대단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토대에 있다.

### □ 집행수단의 한계로 인한 정책수립의 어려움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실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욕적인 실업정책을 수행하는데도 기본적인 한계로 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전달체계로는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민간전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하나 행정기관은 오히려 이러

한 민간전달체계를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하게 관의 주도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 실업정책의 한계는 이러한 빈약한 전달체제로 인한 악순환에 빠져있다.

• 임기응변식 대응 → 빈약한 전달체계 → 시행상의 문제점 노출 → 부정적 여론발생 → 복지예산축소 → 다시 임기응변식 대응

### 3. 문제의 원인들

#### □ 기본적인 기조의 대립

정부 내에 국가복지중심 세력과 시장복지중심 세력간의 갈등과 긴장이 상존한다. 대통령의 언술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 배정을 극히 꺼리거나(기획예산처) 혹은 일각에서 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상반된 노선의 정책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 통일되지 못한 행정기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체계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또한 부처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유난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집권당의 정책조정 기능이 적절히 발휘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끊임없는 부처간 충돌과 정책결정의 지연·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 □ 넘어서지 못하는 벽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투입은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예산부처에서는 여전히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배분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 전체를 현란한 수사이상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팽배해 있고, 고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시장-기업-가족'의 복지공급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4. 벽을 넘어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는 패러다임의 방향이고 둘째는 그 패러다임을 추진할 주체이다.

#### · 패러다임의 방향

새로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공부문(국가부문과 비영리부문)의 복지 공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① 사회복지, 노동복지, 보건의료 등의 국가복지의 확대와 ② 경제성장과 국방이라는 국가재정 운용 기조의 변화 ③ 조세체계 개편(자영업자 소득과약 강화 및 직접세 부담 증대)을 하나로 묶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국가 → 사회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비효율적 예산배분 메커니즘 정비 → 사회정책 행정 및 인력 정비 및 확대 → 사회정책 예산 확대(조세체계의 획기적 개편)
- ◎ 국민(노동계와 시민사회)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부담(조세, 보험료) 증대에 '동의', 국가복지제도 운영에 실질적 참여(미시적 효율성 증대).
- ◎ 기업 → 기업복지의 국가복지화(노동자 평등화 효과) 및 비용 부담 증대

#### · 추진주체의 형성

새로운 복지운동의 주체라고 할만한 토대가 아직 미약하다. 기존의 노동운동에서는 담보하기 힘든 구조적 요인이 있다.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직체계로는 동력의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할 기본 동력은 광범위한 비정규직, 실업자, 주변부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계층들이 조직화되고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조직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 < 발제 > 사회적 약자? 소득격차? 노동운동 역할!

유 병 홍 (민주노총 정책실장)

### 1. 문제제기

#### 1)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사유화(민영화)를 들 수 있다.
-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 번째로 특징짓고 있는 것은 노동자 배제정책이다. 정부는 노동정책을 펴면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철저히 노동배제정책을 폈다. 정부는 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의 대상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는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처리하는 정도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기조로 보아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한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면, 아니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재단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무능력자일뿐이다.

#### 2) 고용문제

##### (1)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 한국정부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의 유연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더 강화되었다.

##### (2)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시장 불안정

- 비정규직노동자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 배제, 용이한 노동통제와 노동량 조절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협하는 것은 일자리 불안정만이 아니다. 그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0-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 적용율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가 많지만 특히 여성은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여성 노동자 7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3) 임금문제

##### (1) 임금소득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전체인구를 소득에 따라 20%씩 나눴을 때,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97년의 4.49에서 99년의 5.49, 2000년의 5.32에 이어 지난해에는

5.36으로 다시 나빠졌다"(한겨레신문, 2002년 2월 22일).

(2)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임시, 일용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열악해졌다.

(3) 고용형태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2. 과거 투쟁의 한계

-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인가?
- 우리 노동운동은 87년 대투쟁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운동 성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즉 지난 시기 노동운동을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대기업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투쟁방식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기업별 조직이 중심이 된 노조 형태로 보아 이는 당연한 측면이 있었고 또 실제 성과를 많이 냈다.
- 그러나 이런 대기업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집단 내부 분리현상을 초래하여 노동계급전체의 단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운동이 과거와 같은 대기업정규직 위주 임금인상전략에 머물 경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 변화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더욱 더 현실성을 갖는다. 이럴 경우 노동자내부에서 격차가 더욱 커져 노동자내부 분리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지속되어 노동자 연대투쟁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자본측의 분할 지배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급 이외의 여타 계급, 계층은 이런 전략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다.

### 3.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민주노동운동진영은 이런 문제에 꾸준히 대응을 해왔다. 일단 87년 이후를 거칠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87-90년대 초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조건 개선이 중심 목표. 개별노동자, 집단노동자의 즉자적 이해 관계중심. (이런 표현 자체를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 바람. 갓난아기가 젖 먼저 먹고, 미음 먹다가, 밥 먹고, 나중에는 황밤을 먹는 것은 당연한 성장과정임.)
- ② 90년대 초 - 중반 : 사회개혁투쟁으로 시야 확대. 자신이 직면한 노동조건 개선의 한계 자각. 교육, 의료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식의 폭을 넓힘.
- ③ 90년대 후반기 이후 :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본격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진출.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타계급, 계층과 연대 필요성 절감.

노동운동진영은 위에서 거칠게 구분해본 것처럼 자신이 피부로 느끼던 즉자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인식의 폭을 넓혀갔다. 소규모 집단적 권익쟁취에서 출발하여 노동계급 권익쟁취, 나아가 이제는 노동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 권익옹호로까지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정치세력화 문제를 단순히 정치활동, 의회활동이란 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동계급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위 시기구분은 아직은 거친 것이다. 세부적인 시기구분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적 추세이다.

#### 4. 노동운동은?

-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전체문제, 공통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수 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추구해온 노동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회보장제도확대를 위한 투쟁을 들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특성상 대체로 빈민, 농민, 소자영업자 등 노동계급과 연대하고 있는 (해야 하는) 계급, 계층에도 함께 적용된다. 이런 활동은 노동계급을 다룬 계급, 계층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주요세력으로 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광범위한 민중연대전선 구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투쟁은 사회복지제도 확충만이 아니라 조세제도 개혁, 의료제도 개혁, 교육개혁 등 많이 있다.
- 노동력재생산비를 얘기하면 일단 임금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노동력재생산비의 원천은 노동자가 시장관계를 통해 자본으로부터 받는 시장임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사회보장제도는 시장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재생산에 기여하므로 이런 사회보장 급여를 사회임금으로 부를 수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한다면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장임금만에 국한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사회임금, 조세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시장임금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별 임금교섭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임금을 높이고 또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세금부과를 막는 총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노동계급전체의 이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다른 계급, 계층과 연대할 수 있다.

#### 5. 민주노총 문제의식

-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2)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 3) 산별 교섭은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산별 교섭을 통한 임금격차해소, 산업별 최저임금 확보와 강제,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한 고용안정(고용안정, 전직훈련, 실업자 재교육취업 등)은 기업별 교섭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고용안정과 질을 달리 하는 노동계급정책이다.
  - 4) 재정과 조세문제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
  - 5)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로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 위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임금 인상 등을 말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성격상 기업별 교섭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총연맹과 정부의 교섭, 총연맹·정부·사용자단체의 교섭으로 처리될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세력과 여타 사회세력이 사회여론과 국회를 통해 논의할 내용이다. 따라서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 세력 형성과 의회내 일정세력 형성을 전제로 한다.
  - 6) 사회적 협의모델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협의모델도 위 1)-5)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주체 측면에서나 사회제도적 객관 상황으로 보나 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허구이다.
- ⇒ 민주노총은 기업별 임금인상 노력에서 출발하여 이제 사회임금 인상, 산별교섭, 사회적 협의(협의, 교섭 등등), 정치세력화 등 총체적 문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다. \*\*

#### <부문토론 2> WTO 뉴라운드와 한국 자본주의, 농업

· 취지 : 정부의 쌀 농사 포기 정책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함께 무너집니다. 게다가 쌀 농사와 농업의 붕괴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까지 위협합니다.

- 주관 단체 : 농업회생연대(준)
- 시회 : 장상현(경상대)
- 발제 : 박진도(충남대)
- 토론 : 서형원(환경연합), 농이연, 민주노총 등
- 전체토론

#### <참고자료> 농업회생연대운동 제안문

- 쌀 농사를 살려, 땅과 생태계를 살립시다! -

농업회생연대(준)

#### 정부의 쌀 농사 포기 정책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가 판을 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과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3-4년 내에 관세도 내리고 개방도 해야 한다는 WTO 각료회의 결정에 맞춰 신 농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림부장관은 “2004년 쌀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거나, “국내외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국내 쌀값이 지금보다 75% 더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3년과 2004년 정부 수매가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체 농가의 77.9%에 달하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저하는 우리 농산물과 농업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급기야 우리 농업은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 쌀 농사가 무너지면 농촌이 붕괴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함께 무너집니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제교역을 위해서는 쌀과 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을 죽이고 농촌을 파탄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곡물 수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의 약 80%를 독점 지배하는 카길 등의 소수 곡물 다국적기업과 몬산토 등 농화학·종자 다국적기업에 자신의 생명줄을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대해 검증된 바 없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땅의 소비자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 농

산물의 홍수에 휩싸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장의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돌보아온 조상들의 '신토불이'라는 지혜도 책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게다가 쌀 농사와 농업의 붕괴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까지 위협합니다.

쌀 농사와 농업은 '식량 주권'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만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은 춘천담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홍수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수 담수기능, 대기정화기능, 수질정화기능, 폐기물처리기능, 토양유실경감기능 등 연간 약 20조원 이상의 비경제적 가치를 생산합니다. 또한 농업은 지역사회의 유지, 자연환경의 유지, 자연경관의 제공 등 여러 가지로 사회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져 생태계의 파괴를 동반할 것입니다.

### '보상지불제' 확대실시로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쌀 농사와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전체 농업규모의 축소와 기업농 체제로의 재편을 농업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기업농이지, 외국의 대규모 기계농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농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농업포기정책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식량주권과 식품 안전성, 깨끗한 환경(건강한 생태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안은,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 대가 외에도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농민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농가소득에서 직접 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51%, 유럽연합 77%, 스위스 80% 등인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만큼의 보상지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보상지불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면 농산물 가격을 내리면서도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값싼 수입 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 국민들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농업 기획자로서의 지역농협을 건설해야 합니다.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협이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경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중간 발표되는 등 그 동안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다면,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의 중요한 과제는 종래에 진행되었던 소극적인 유통중심의 조직화에서 지역 농민들의 참여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생산과 유통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지역농업의 기획자로서 지역농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개혁으로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농민의 조직적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농민 여러분, 친환경농업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업을 지킵시다.

쌀 재협상에서 밀려 2004년을 맞으면 쌀은 개방되고 수입량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쌀 농사포기정책과 대책 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쌀과 농산물 자체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차별화 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기존의 쌀 농사 중심만으로는 수입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은 어렵습니다. 점차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쌀과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합시다.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농업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과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대가(보상지불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친환경농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결단할 때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해야만하고, 그럴 경우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광우병 파동 때 농업담당 장관이 독일 농업을 소규모 유기농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농업의 장기전략을 새롭게 선언해야 합니다. "쌀 농사를 축소 또는 포기하는 대신 농의소득을 증대시킨다"가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여 장차 한국 농업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선언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합시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합시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농사법을 점차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바꾸어 갑시다. 우리 농민의 슬기로운 선택이 한국농업의 미래,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문화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 노동자 여러분, 농민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수입 농산물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보상지불제 확대실시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대신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질 좋은 쌀 등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쌀 농사와 농업을 지키는데 있어 우리 노동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나서야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쌀 농사 기반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다른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농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도시의 빈민이나 비숙련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실업문제와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농업과 농민들의 문제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일어섭시다.

광우병과 구제역, 다이옥신 돼지고기, 유전자조작농산물 등으로 인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불균형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각종 패스트푸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모든 사람이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불제 및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실시를 요구합시다. 1차 산업에 의해 생산

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검증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학부모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아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의 급식 재료로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조례제정운동에 나섭시다.

환경단체 회원 여러분, 농촌과 농업을 살려 우리 생태계를 살립니다. 쌀 농사와 농업의 환경적 기여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보상지불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반환경적 인 농업 포기정책도 바꿔나갑니다.

생활협동조합의 회원 여러분, 농산물의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 갑시다.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공평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갑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서로 신뢰하며 돕고 사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종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농사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와 종파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이 땅의 농민들과 국민들, 환경을 살리는 이 운동에 나서리라 믿습니다.

대안 문명과 공동체 운동에 나선 여러분, 여러분의 실천 범위를 넓히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미흡할지 모르지만 우리 농촌을 환경친화적인 소농들의 협업 공동체로 바꾸어 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이상적인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것 못지 않게 느리고 힘들지만 전체 사회를 우리 민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쌀 농사와 농촌 살리기 주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후보가 이 운동의 대의에 따르고 실천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앞장서서 이 운동을 조직합니다.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모든 농민단체, 노동단체, 소비자단체, 교사와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대안공동체, 정치단체 등에 제안합니다. 중앙단위는 중앙단위대로 지역단위는 지역별로 쌀 농사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희생연대를 조직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뜻이 같은 부분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실천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생명 그리고 환경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농업과 농촌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토대입니다. 지금 이 토대의 뿌리인 쌀 농사와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생명,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함께 나서서 바로 세웁시다. 농업희생연대와 함께 행동합니다. 서명운동, 집회,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개발과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유일한 토대인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대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 농업희생연대 운동의 방향과 과제

### 1. 필요성

농업위기의 심각성 - 식량자급도 저하, 농가경제의 악화

뉴라운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부는 농업보호 축소로 사회복지 지출확충의 재원 마련하려는 정책방향 추진 중

첫째, 농업희생은 농민운동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

둘째, 기존연대운동과의 차별성

- 민중연대(준) - 반김대중정권, 내지 상설적 공동투쟁체

- WTO 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 - 반제국주의 운동의 일환

- 농업희생연대는 위의 두 연대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대중단체들도 포괄하기 위하여 필요함

셋째, 정부에서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업특위를 조직. 그러나 농업축소, 농의 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진을 통한 농의소득증대로 방향이 잡힘. 농민단체들은 들러리에 불과.

### 2. 구성

- 농민단체 : 전농, 정농회, 가농 등

- 농업연구단체 : 농어연, 농정연구센터, 협동조합연구소 등

- 소비자단체 : 생협연합회 등

- 여성단체 : 여성민우회 등

- 노동단체 : 전교조, 민주노총 등

- 환경운동단체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그 외에 지원할 문화, 언론 부문 종사자

### 3. 집행구조

(농업희생연대) 협의체 수준으로 운영(만장일치체 운영) / 정책기획단위 / 실무단위

### 4. 사업

- 뉴라운드 대응, 비전 2011 등에 대응

- 우리 쌀 지키기 운동

- 직접 지불제 확대 시행 운동

- 학교급식, 회사급식운동 : 국산, 환경농산물 우선

- 민주농협 건설운동

- 환경농업 확대운동

- 농업부문 대체예산 확보운동

- 농업보호와 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운동

### 5. 추진과정

- 구성과정 : 전농이 중심이 되어야 함.

## [(가칭)농업회생연대] 결성을 위한 간담회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02년 3월 14일 오후 6시, 전농 사무실
- 참가단체 : 생협전국연합회, 한살림,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어촌사회연구소, 정농회, 파주환경운동연합, 원불교 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교조,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협노조, 민주노동당

### □ 논의결과

1. [(가칭)농업회생연대] 제안문(초안) 검토 : 간담회에 참가한 단체 전원이 제출된 '제안문(초안)'에 대해 검토, 동의하였음. 이 제안문(초안)은 [(가칭)농업회생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개인에게 전하는 문서로 사용하기로 함. 이후 수정·보완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논의 후 수정·보완한다.
2. 실무소위 구성 및 모임 일정 : [(가칭)농업회생연대]의 위상논의와 구체적인 활동계획, 출범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 실무소위 구성현황 : 전농 이종화 대협실장, 정농회 신보연, 전국농협노조 강길용 정책 차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국장, 전교조 최철호 대협실장, 생협전국연합회 박상신 차장, 농어촌사회연구소 허현중 부소장, 민주노동당 박창규 정책부장 등 8명 / 간사단체 : 전농

- 실무소위 회의 : 2002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전농사무실

## < 토론문 > 넘쳐나는 쌀, 논 만드는 새만금 간척

- 월간 [함께사는 길] 2001년 10월호 기고문 -

서형원(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 남는 쌀보다 남는 세금이 더 걱정?

쌀이 남아 걱정이란다. 한 톨 밥알이라도 남길라치면 지엄한 불호령이 떨어지곤 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웬 팔자에 없던 호강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국고를 털어 논을 만들고 있다. 국민 한 가구 당 50만원, 전북 도민 한 가구 당 약 13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것이다. 마치 남아도는 세금이 더 골치 아프다는 듯 말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가?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보기로 한다.

상황은 이렇다. 올 연말 쌀 재고는 1,100만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한 재고 규모(570만석)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농협이 의뢰한 한 연구는 이 때문에 쌀의 시장가격이 14.3% 하락하고 전체 쌀 농가의 소득이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 과잉공급 구조와 간척사업

문제는 올 한해가 아니다.

쌀 공급과잉은 이미 구조화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탁에서 육류와 밀, 해산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 일인당 쌀 소비는 1980년 이후 30% 가까이 줄었다. 국내 쌀 생산은 늘지 않았지만 쌀 수입이 증가해 공급 증가를 부추겼다. 이 두 추세 모두 당분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앞으로는 대형 국책 간척사업이 쌀의 과잉공급 구조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전농이 공급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수입쌀은 과거 5년 간 연평균 8만여 톤이었는데, 새만금 간척지 한 곳에서만 연간 14만 톤의 쌀이 쏟아져 나올 계획이다. 아직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지 않은 영산강 3단계, 시화지구, 화옹지구 등도 조만간 각각 수만 톤씩 쌀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쌀 공급 과잉은 수매 확대나 북한 쌀 보내기 같은 땀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쌀 수입이다 간척사업이다 해서 공급이 마냥 증가하는 것을 방치만 할 순 없지 않을까? 사실 정부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소 농민을 농업에서 퇴출시키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이 그것이다. 간척사업을 지속하고 쌀 수입을 확대하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 정부의 해법은 중소 농민의 퇴출

정부는 농업경영의 규모를 키워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농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규모의 농지를 제공하는 국책 간척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를 보자. 정부 계획대로 평당 7만원에 달하는 조성단가를 감당하고 6헥타르(18,15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은 거의 없다. 12억7천만원을 쥐야 새만금 농지의 가장 작은 단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은 헬기 타고 농약을 뿌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새만금 간척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는 전북 중소 농민의 퇴출을 겨냥하고 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이 씌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새만금 간척호수를 살리는 길은 새만금 유역, 즉 전북 일대에서 비료와 축산분뇨 등을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판로도 어려운 판에 재벌 농사꾼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료 줄이고 가축 줄이는 새만금 규제에 시달려야 할 운명이다.

단적으로 말해, 넘쳐나는 쌀과 대형 간척사업의 모순은 자기 땅을 아끼고 가꾸며 살아가는 소농의 몰락을 통해 해소될 것이다. 몰락한 농민의 운명은? 간척지를 차지한 기업형 농장의 농업노동자가 거기서 충원될 것이다. 이것이 농정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미래의 농업이다.

### 자립적 소농 - 농업과 환경의 미래

나라 밖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방 압력이라는 모진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의 기반을 닦는 거대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농업의 기반인 중소 농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으며 그 핵심에 새만금 간척사업이 있다. 쌀 재고 과잉 사태는 농업구조조정을 공공연하게 추진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이것이 쌀 생산의 어느 부분, 농민의 어느 계층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립적이고 건실한 소농을 우리 농업의 주류이자 기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농민운동의 관심일 뿐 아니라 환경운동의 입장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기 땅을 아끼고 가꾸는 소농들이야말로 생태 농업의 담당 계층이며 생태농업은 생태적으로 지탱가능한 사회의 경제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국제 쌀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우리 농업경영의 미래 또한 생태농업에 있다. 생태 농업은 즉 고부가가치 농업이기 때문이다. 농민과 환경운동가가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야 할 대안의 대략적인 방향이 여기에 있다. \*\*

### <부문토론 3> 표현의 자유와 진보의 정치

· 취지 : 표현의 자유 운동을 둘러싼 사회변동과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등 지배권력의 억압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향후 대응을 논의한다. 특히 음란물, 청소년 보호 등을 둘러싼 문화적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및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진보진영 내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해본다.

- 주관 단체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사회 : 김동민(민교협)
- 발제 : 강내희(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대행 및 정책기획위원장)
- 토론 : 장어경(진보넷), 안성배 등
- 전체토론

### <발제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라

강 내 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대행 및 정책기획위원장)

#### 1. 누가 음란물을 반대하는가<sup>1)</sup>

오늘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떤 세력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일까? 크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겠지만 진보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각자 안에도 다양한 견해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이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과 논의의 지형이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할 때 비로소 표현의 자유 신장에 앞장설 '진보의 연대'를 위한 기반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형의 복잡성"을 언급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단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우선 진보진영을 생각해보자. 노동, 생태환경, 문화, 여성 부문의 다양한 운동세력은 서로 혹은 내부에서 다양한 입장의 분할선에 따라 표현의 자유, 특히 음란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인다. 2000년 초 장선우의 <거짓말>을 음란폭력성매체공동대책협의회가 음란물이라며 고발하여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여러 단체들이 보여준 반응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당시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민중운동 좌파 세력은 즉각 검찰 조사를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로 보고 반대한 반면, 과거 정치적 개혁에서는 동반자였던 여성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은 음대협과 입장을 같이 하는 편이 많았다. 문화운동 영역에서도 문화개혁을위함시민연대(문화연대)나 영화인회의 등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주장하며 음대협의 고발 행위와 국가의 개입을 비판했지만, 1980년대 진보적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나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즉각 개입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

1) 이 글은 『문화과학』 28호에 실린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라—성북지와 송고의 미학을 위해」를 오늘 발제를 위해 축약한 것이다. 원래 글은 문화과학편집위원회가 4차례의 토론을 통해 만든 공동작업으로서 이동연, 심광현 등의 도움을 받아 발제자가 최종 정리를 맡았었다.



하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으며, 그 중에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퇴폐적이라고 비판하는 신문 기고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진보라는 것이 결코 일피암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음란폭력물, 그 중에서도 음란물에 대한 반응에서는 과거 식의 진보라는 관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대립되는 입장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음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갖기 때문에 생길 것이다.

여기서 내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면 당연히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펼치기 이전에 음란물을 반대하는 이유를 좀더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음란 표현을 반대해온 개인이나 단체는 작가 이호철과 같이 과거에 넓은 의미의 진보적 예술인으로 통하던 예술인,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강지원 검사나 김성이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국가권력에 소속된 관료들, 손봉호 서울대 교수나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류의 보수적 도덕주의자, 양혜경, 최영애 등 여성단체 인사들, 그리고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계열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제 이 다양한 계열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내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계열로 손봉호나 권장희와 같은 특정한 종교적 입장에 서있는 보수적 도덕주의자의 경우는 음란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일종의 보수적 시민운동의 형태로서 이들의 음란물 반대운동은 80년대 초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반대운동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상당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최근 기윤실의 음란물 반대운동이 문화소비자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란물 반대운동이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문화소비자운동이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음란물에 대한 반대를 종교 대 대중문화라는 이분법에서 보지 않고, 대중문화 내의 문제로 삼으려 하는 기윤실의 문화소비자운동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실제로 일반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소비자운동은 소비자의 대상을 크게 한정하거나, 적어도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시키고, 소비자의 불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윤리적 정화운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이 문화소비자운동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보수적인 개신교도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집단적 반격 중 비교적 세련된 전략 형태로 볼 수 있고, 대중문화의 시대적 영향력에 대한 종교적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sup>

종교적 도덕주의자들의 음란물 혐오증은 기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이들은 음란물과 음란표현 행위를 모두 청소년을 미끼로 한 작가, 혹은 업주들의 상업적 이기심의 산물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전술로 이행된다. 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간섭하려 든다. 음란물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연대의 가능성이 있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이들은 종교적 도덕주의에 기반한 음란물 혐오증을 드러내고 있으며, 타인의 성적 표현행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칫 잘못 나가면 문화화시즘

2) 정보법이 제정된 1997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대중문화비판이 개신교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윤실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된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강영안 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를 비롯해 『기독교와 대중문화』(박종균 저, 대한기독교서회, 1999), 『대중문화, 최후의 유혹』(심상언, 낮은올타리, 1998), 『대중문화도 거룩해 질 수 있는가』(방선기,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심상언, 낮은올타리, 1999) 등의 책들이 출간되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수반한 현대 대중문화를 사탄의 문화로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 이는 특히 1990년대 한국에서 대중문화의 급격한 성장이 교회성장과정에서 청소년들과 교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여기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로까지 나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들의 입장이 사회적 억압을 조장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자칫 진보적 삶의 방식을 탄압하게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계열로 강지원이나 김성이 등으로 대변되는 검찰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료들과, 나아가서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관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강력한 국가기구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로 도덕적 캠페인에 의존하는 첫 번째 계열에 비해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음란물에 대해 법적 고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정보위나, 정통윤이 기다렸다는 듯 이를 수용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계열과 두 번째 계열은 도덕적-제도적 짝패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1997년 정보위와 1996년 정통윤이 만들어질 당시 첫 번째 계열에 속한 인사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고, 지금도 이들의 개입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두 계열이 서로 비슷한 도덕성을 드러내지만, 음란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정보위나 정통윤은 손봉호나 권장희 류의 청소년보호론 캠페인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보면 후자와의 도덕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다만 자신들이 장악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후자의 입장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도덕적-제도적 짝패 관계는 겉으로보다는 암묵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정보위나 정통윤 관료들은 검열과 심의의 관료적 전문성을 내세우며, 청소년보호는 유해매체 식별과 그것과의 격리라고 하는 기술적 제도적 접근에 의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보인다. 예컨대 정통윤이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술적' 정확성에 대한 깊은 신뢰 혹은 집착을 드러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감성적, 문화적 맥락이 제도적, 기술적 여과장치로 인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 있다. 이들은 첫 번째 계열의 인사들과는 달리 음란물을 놓고 감정적인 성토 발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와 조사라는 제도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집약하자면 정보위와 정통윤 관료들은 음란물이 미칠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관료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국면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가 있으며, 사회적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진보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에 의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을 비판하는 것 못지 않게 문화적 진보진영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음란물과 관련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여론과 담론정세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세 번째 계열은 상당수 여성 개인 혹은 단체들의 경우이다. 개인이나 단체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들은 음란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운동에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들이 음란 표현물 제작과 유통을 반대하는 것은 음란물이 사회에 버젓이 유통될 경우 여성들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성들의 이런 음란물 거부감에 대해 먼저 이해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이성애적 성애를 중심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부장적 지배 속에서 포르노가 남성애에 의한 여성의 성폭행, 성추행을 촉발할 수 있는 환경상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방지할 수야 없는 법이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음란물 기피, 혐오, 거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비판하는 것과 성애 자체에 대한 거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곡된 남성의 성 지배

를 반대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자신의 성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나는 여성들이 “여성비하적’ 표현의 문제 때문에 성적 표현물을 무조건 억압하는 보수주의적 세력과 연대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여성주의적 표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한다. 포르노 혹은 음란물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진 성욕과 성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며, 인간의 성욕과 성애는 사회적으로 금지하거나 회피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외침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성적으로 노골적이지만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시각과 의제를 다룬 표현물, 이성애, 동성애 여성, 성적 소수자의 쾌락을 위한 그러나 성차별적이지 않은 포르노, 그리고 좀더 ‘기이’하고 ‘변태적’인 성적 행위까지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여성 주체적 표현물까지 꿈꾸고 상상하고 만들어내야 한다.”<sup>3)</sup> 여성적 음란의 자유가 남성적 음란의 자유만큼이나 인정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 <거짓말> 사태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이 음란물을 거부한 태도는 여성 자신의 욕망마저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의 운동들은 주로 여성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에 주력한 반면 여성 자신의 성적 욕망의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음란물의 표현이 성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성적 욕망의 자율적 표출로 나아가도록 하는 운동은 앞으로 논쟁적인 사안이 될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운동과의 연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네 번째 계열로, 학부모단체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작년에 표현의 자유 옹호를 주요 목적의 하나로 삼아 활동을 벌여온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정보법폐지공대위)에 참여해오던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가 이 공대위로부터 공식 탈퇴를 선언한 적이 있다. 학부모연대가 당초 정보법폐지공대위에 참여한 것은 기윤실과 같은 규제방식의 사회캠페인보다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었는데, 정보법폐지공대위가 올 여름 박진영의 앨범 <게임>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 것이다. 박진영의 앨범은 자녀 교육에 부적절한 연애편과 성 담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연대 일반 회원들의 정서였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라도 성 표현이 논란이 되는 실제 사건 속에서는 이견이 생긴다고 위에서 지적한 것은 사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학부모연대의 정보법폐지공대위 탈퇴는 음란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극복하고 난관을 거쳐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 보호” 이전에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 단체도 결국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의 공대위 탈퇴 역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 단체의 최종 태도를 보면, 음란물 표현 지지는 우리 사회 성의식 일반에 비춰볼 때 너무 급진적으로 보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음란물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음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끼칠 영향력에 대해 학부모가 지닌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근거 없는 반응으로 치부해선 안될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내 아이”의 포르노 접촉이 가져올 영향과 결과에 대한 우려임이 분명하다. 이 우려를 표현의 자유 확대의 요구로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 계열로는 예술적 가치 때문에 음란물을 비판하고 음란 표현의 자유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거짓말>에 대해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이라며 신문기고를 통해 비판을 가한 소설가 이호철이 그 대표적 경우이며, 민예총이나 작가회의에 속한 상당수 작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입장에는 음란물과 예술작품은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거나, 음란성을 띠는 것이라도 고도의 예술적 승화가 이루어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대상

3) 권은선, 「표현의 자유와 여성주의적 시각」, 월간 『문화연대』, 2001년 11월호.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 나 역시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며 작품을 수준 높은 것으로 만드는 노력은 중요한 예술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은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아래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지금까지 음란 표현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정도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세 가지 쟁점을 추출할 수 있겠다. 첫째, 음란물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진보를 표방하던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가 음란물에 대해 드러내는 혐오의 태도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아이들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 쟁점은 성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며, 올바른 해결책은 성 복지라는 새로운 관점의 사회복지로 전제해야 나온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셋째, 음란물에 대한 공포 또는 혐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보수주의는 음란물을, 혹은 성적으로 명백한 표현을 혐오하거나 공포로 여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 2. 신자유주의와 문화 보수주의의 협력

<거짓말> 사태와 관련하여 이호철과 같은 문인 개인, 민예총이나 작가회의 같은 예술단체가 보여준 음란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은 <거짓말>은 예술성이 없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변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셈이지만, 음란물도 표현물인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음란물이 넘쳐나도 좋단 말이나 할지 모르나 본질을 흐리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그것의 사회적 관리는 별도의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더라도 그 관리는 사회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sup>4)</sup> 이런 입장은 <거짓말>을 음란물이라며 예술적 창작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쪽은 물론이고, 이 영화를 음란물로 몰아붙이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피하여 어떻게 극장상영을 성사시켜 이윤을 내고자 베를린 영화제에서의 본선진출을 이유로 문제의 영화가 높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주장한 영화제작사와도 다르다. 나는 <거짓말>이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구적 표현물인 한 제작과 유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작품이 예술작품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은 불법인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음란물의 제작을 불법으로 해놓은 현행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문제는 표현물의 예술성을 중시하면서 음란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어떤 정세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다. 음란물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호철이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민예총과 작가회의는 넓은 의미의 진보 세력에 속한다. 하지만 오늘 시점에 진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음란성”을 둘러싼 입장을 따져야 할 것 같다. 현 단계에서 진보세력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이다. 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음란 표현물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나는 현단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문화보수주의와 협력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양자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둘이 똑 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선호하는 주체의 형태와 문화보수주의가 선호하는 주체의 형태도 다르다. 미국을 예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정세가 형성되던 시기인 1980년대에 등장

4)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에 대해서는 즐고, 「<거짓말> 사태가 제기한 문제들—예술의 음란성 논란과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문화과학』 21, 2000년 봄, 159-179 참조.

한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은 당시 급증하던 기업합병에 참여하면서 고임금을 받던 경영학석사출신을 포함한 “여피들”(yuppies)이었다. 이들은 도시에서 소비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문화소비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전통”과 “가족적 가치”, 신앙심 등을 귀하게 여기던 문화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른 개인적 성향을 드러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새로운 주체(형태)들이 만들어졌다.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희생자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을 기획하고 더 적은 노동자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고급인력, 평생고용의 안정적 직업이 갈수록 귀한 시대에 빈번한 직업 전환에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 혹은 이전가능 기능 소유자 등이 그런 주체들이며,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김대중 정권이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이라며 선전한 “신지식인”도 포함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20 대 80 사회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형들보다는 실패자, 희생자를 더 많이 양산해내는 법이다. 구조조정을 당해 일자리에 쫓겨난 사람들과 그 가족, 지금까지 문화시장에서 욕망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청소년, 주부는 이제 갈수록 “생산적 소비”에 참여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처럼 이들은 사회 주변으로, 마약, 매춘, 범죄 등으로 내몰리기 쉽다.

신자유주의와 문화보수주의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들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문화보수주의가 도덕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허물을 덮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보수주의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개인 도덕의 문제로 환원한다면 문화적 보수주의는 예술적 가치를 내세우며 음란성, 퇴폐성, 폭력성을 담은 문화적 표현물을 비난한다. 하지만 음란성, 퇴폐성, 폭력성을 묘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양산해내는 신자유주의를 공격할 수 있을까?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정치공세와 경제정책으로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고, 당연히 사회적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음란과 폭력의 표현을 비난하는 것은 이런 불만을 잠재우려는 노력, “성공시대”를 구가하는 “신지식인”의 변명이 아닐까? 마약, 폭력은 물론이고 이성애적 성애와는 다른 성애 표현을 죄악시하고,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방종으로 모는 것은 계속 주변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굳이 비난받을 음란성이 있다면 이런 “음란한” 통제라고 본다. 오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음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론적 외침을 만들어내게 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 3. 성 복지를 위하여

앞에서 아이들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이 우려를 표현의 자유 확대의 요구로 전환시킬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했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나는 학부모 가운데 아이들의 공부에 우리가 관리하겠으니 성 표현 부분만큼은 국가가 대신 책임져달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공교육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는 지금 국가 대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개별 학부모가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내용을 일일이 챙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비만큼은 학부모가 거의 다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의 성욕에 관한 한 한국 학부모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이며, 이 결과 거의 공포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처지의 학부모가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은 대처방안이 없으니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것 같아서 일면 학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요청은 상당히 ‘진보적인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질문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것이다. 혹시 학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복지, 특히 성 복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닐까?

일단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명확하게 설정되거나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학부모들은 왕성해지는 청소년의 성적 활동에 대해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는 그래도 성행위의 사회적 규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른들의 걱정이다. 이런 생각에는 최근 갑작스럽게 확산된 인터넷 등 신종 매체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도 작용하는 것 같다. 많은 학부모는 이들 매체가 음란 매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청소년 음란물 접촉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감은 이 점에서 학부모 자신의 문제인지 모른다. 국가더러 청소년 성 문제를 책임지라는 것도 따라서 성인으로서 충분한 성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학부모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이들이 접촉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무지에 의한 공포로만 여겨서는 안될 것 같다. 학부모의 공포는 나름의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숙한 성 활동이 아직도 퍼렇게 살아있는 혼전 순결의 이데올로기가 자녀의 인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학부모는 너무나 잘 안다. 더 실질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성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가 전혀 없으며, 이런 조건에서 자유로운 성 활동은 곧장 자녀의 손해로 이어진다. 단적으로 한국에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전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지닌 의미는 사실 우리 사회에 성 복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성욕은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역능이며,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 에너지의 원천이다. 성욕은 어린아이에게도 있다지만 대개 사춘기인 10대 초중반에 분출할 정도로 활발해진다. 성욕을 무조건 방출할 경우 개인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성욕을 무조건 표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지금 한국처럼 10대 말은 물론이고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성욕을 부모의 관리하에 두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로 이해해야 한다. 줄리엣이 로미오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겨우 14세이고,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놀이를 벌인 것도 “이팔청춘” 16세로 나온다. 이런 조숙한 성 활동을 문학작품에만 나오는 현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지금 자녀들의 성 활동을 공포에 차서 보는 부모들의 부모들 시대에도 10대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 관행이 있었고, “업어서 신랑을 키웠다”는 옛말에서 보듯 이성애의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20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결혼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 파트너를 찾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과 함께 노동력에 관한 통제를 하게 되면서, 대중교육이 점차 대학교육에까지 확산되면서 생겨난 역사적 현상이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처럼 청소년의 성 문제를 부모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의 경우 국민국가 차원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한편으로는 학비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가 10대 말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주택은 아니더라도 주거 자금은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한편으로 보면 사회복지의 일환이지만 이 사회복지에 젊은 세대의 성 복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한국에는 노래방 수보다 더 많은 2만 5천여 개가 넘는 러브호텔이 성업중이다. 러브호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성욕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지닌 기본 성욕은 어떤 형태로든 분출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성 표현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에서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영화관이든 러브호텔이든 밖으로 나도는 것은 한국적 핵가족 제도에서 젊은이들이 정식 결혼으로 분가하기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정확히 말해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행위와 성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성적 복지를 포함한 사회 복지가 한국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혼이 정상인 상황에서 성적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정상적 통로가 없을 경우 성 표현은 비정상적인 통로를 갖게 된다. 한국에는 러브호텔 이외에 엄청난 규모의 유흥업과 매춘이 성업중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 표현의 자유가 바로 유흥가와 매춘소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이런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성행위와 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특히 성 복지로서의 사회복지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고 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

의 성 권리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면 좋겠다는 것은 사회가 복지를 제대로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 4. 음란공포증,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한편 포르노 등 음란물에 대한 혐오가 지닌 문제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지닌 학부모단체나 여성단체는 음란물의 단속은 성폭행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예방의 논리는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빈번한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서 이해할 구석이 없지는 않으나 방금 말한 복지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이 예방 담론이야말로 성 공포증, 혹은 성도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성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한다. 이런 구호로 구성에라는 청소년 성 전문가가 스타로 났다. 언뜻 들으면 타당한 말 같지만,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의 논리는 성도착을 죄악시하면서 성을 위생, 예방, 안전, 치안의 범주에 여전히 포획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포르노에 탐닉하고, 음란물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성도착으로 보일 것이다. <거짓말>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 영화를 음란물로 보는 관점에도 이런 성도착 공포가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공포야말로 편집증(paranoia)이 아닐까? 성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즉 깨끗하고 질서 잡힌 특정 형상)으로만 보려는 것이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성 다양성의 미학을 선병질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거짓말>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음란물공포증(porno-phobia)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런 태도는 이질적인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위험한 것에 대한 공포나 혐오와 통한다. 포르노공포증은 타자공포증이며, 우상공포증이다. 그것은 타자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아 중심적이며, 동일성의 원리에 포박되어 있는 심리상태이다. 포르노공포증이 성의 미학을 선병질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병질의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이질적인 것들이 투입하는 것을 참아낼 능력이 없는 허약한 체질의 인간이다. 사실 건강한 신체라야 내부에 더러운 것, 위험한 것, 추한 것, 악취 나는 것, 불쾌한 것을 속에 포함하거나 참아내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자신의 깨끗한 피만 허용하고, 콧물, 침, 고름, 오줌, 땀, 정액, 비듬, 때, 등의 영락물(零落物, the abject)을 한사코 신체 밖으로 내치기만 할 것인가? 영락의 존재는 “우리”에게, 동일성의 원리에 포괄되지 않는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영락의 존재들은 외국인 노동자, 나라를 잃어 떠도는 사람들, 부랑자처럼 정체를 잃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한국의 문화적 코드에 따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사람, 혹은 한국의 정통 혹은 지배 문화에 귀속하지 못하는 사람, “정상적” 삶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사회의 “사이에 낀” 존재, 지배 사회에 투입한 존재로 보이며, 따라서 쉽게 배척과 업신여김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런 존재와의 공존을 거부할 때 그 사회는 편협한 자기 중심적 사회, 파시즘이 횡행하는 사회가 된다. 한 사회에 사회생태적 차원이 있다면 서로 차이를 지닌 영락의 존재들,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인 존재들을 더 많이 포괄할 수 있을 때가 더 바람직한 상태일 것이다.<sup>5)</sup>

미학적으로 볼 때 영락의 존재를 타자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속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동일성의 논리 안에 포박되어 있는 응졸한 선병질의 미학이다. 더러움, 못생김, 위험함 등을 배척하는 것은 숭고미를 외면하는 것이다. 숭고의 상태는 상상까지 초월하는 상태이다. 작든 크든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크기, 비위를 뒤집는 역겨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과 직면하려는 자세, 통념을 깨는 개념적 실험 등이 숭고미를 찾는 노력이다. 알다시피 현대예술의 기획은 이런

5) '영락물'에 대해서는 레이 초우, 『종족 영락의 비밀들』, 『혼적』 2(2001)를 참고할 것.

숭고의 미학을 예술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 예술 개념을 뛰어넘으려는 실험이자 노력이었다. 번기를 예술이라 명명하며 제도예술의 예술 개념을 깨부순 뒤상의 실험 없이 현대예술의 역사가 가능했겠는가? 음란물은 예술이 아니라는 견해는 예술 안에 예술이 다룰 수 없는, 예술을 초과하는 것은 들어놓지 않으려는 선병질의 미학을 추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숭고의 미학을 금지한 예술활동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음란 표현을 배척함으로써 한국의 미학은 숭고미를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인가?

#### 5. 음란은 숭고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진보의 상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의 정권들이 인구통제를 위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최근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인구통제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표현의 문제가 사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전 사상의 정치에서 표현의 정치, 성의 정치로 전선을 옮기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상 대 표현, 이데올로기 대 욕망의 이항 대립적 구도는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표현으로 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성화된(sexualized) 사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탈육(脫肉)과 탈성(脫性)의 사상이 아닌, 신체와 성욕을 가진 사상으로 말이다. 이것은 부르주아 질서에 의해 관리되는 일탈을 수용하자는 소극적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일정하게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내가 버터내기 어려운 ‘남’과 공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정체성이다. 이때의 아름다움은 나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 미학은 안전한 아름다움의 미학이 아니라 위험한 미학, 숭고의 미학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상은 이때 불온한 것들만이 아니라 음란한 욕망의 표현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표현도 ‘심오한’ 사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때 이 심오한 사상은 욕망과 신체에서 나온 성화된 사상일 것이다.

이제 진보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진보를 외치며 정치적 진보를 외면하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되겠지만 정치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문화적으로는 보수적 태도를 고수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예술적 가치를 말하며 숭고미를 축출하려는 보수적 태도도 마찬가지다. 음란물을 저질로 보는 것은 대중을 저질로 만들어 거세하려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러움’에 혐오를 드러내는 각종 청결주의는 경계의 불분명함을 참지 못하는 편집증이며, 바호친이 말한 ‘웃음’과 그 여유를 상실한 생명혐오 증상이다. ‘숭고’를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를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치적 보수만이 아니라 문화적 보수도 보수이다. 문화에서 진보란 무엇일까? 예술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표현의 실험을 최대한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사회 진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 진보의 개념도 이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성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회 복지 개념도 확장해야 한다. 청소년도 자율적 성 권리가 있고, 여성도 자신의 성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음란물 제작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이하고 음란한 표현을 허용하라! 성행위에는 (절대적) 도착이 없다. 표현에도 (절대적) 도착은 없다. 음란은 오히려 숭고하다. 우리 속에 내재한 타자성을 현기증 나게 일깨우지 않는가. \*\*

### 〈부문토론 4〉 새로운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환경운동

· 취지 : 환경운동은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부문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태사회의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포괄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운동이 가지는 근본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해 사회운동 각 분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변화 전략인 환경운동의 성격과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참가자 전체의 논쟁으로 들어간다.

- 주관 단체 : 환경운동연합
- 사회 : 장재연 (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20분) : "새로운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환경운동" - 이시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순홍(바람과 물 연구소 소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홍성태(민교협 사무처장)
- 전체토론

### 〈발제문〉 새로운 사회변화 전략으로서의 환경운동

이 시 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가톨릭대학 사회학 교수)

20세기의 마지막 30년은 문명전환의 한 세대이었다. 지난 3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의 신화가 그 바탕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자원고갈과 지구의 생태 용량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이념은 분명하였다. 보다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경고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0년 간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부가 늘어나고 개인적인 삶이 좋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대적인 빈부격차의 확대, 농촌의 폐쇄, 생태환경의 파괴,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과 공기, 그리고 토양의 오염과 새로운 화학물질에 의한 유전자변형 위험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에는 제도적인 민주화가 일정한 정도 성취되었지만 밖으로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고, 사회정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어느 쪽을 모아가야 하는지 일치된 의견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흩어져 있다.

### (1)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새만금간척 사업은 15년 전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환경생태의식을 수용해 낼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일부 경제관료들이 새만금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다를 매워 땅을 만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 후 서산간척을 비롯한 여러 간척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시화호의 실패이었다. 동강댐 건설계획을 사전에 전면 중단시킨 것도 사람들의 새로운 인식과 생각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과연 생태주의적인 삶으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와 별개로 의식상으로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것도 새로운 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담론수준에서는 환경과 생태는 지배 담론이 되어 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이후 어떤 독재국가도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듯이 아무리 개발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도 환경생태를 무시한다고 공언할 수가 없고, 새만금 사업자들도 '친환경적인 시공',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표방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성을 마음속으로 경시하고 비하하고 싶지만, 이를 입밖으로 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생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정책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사람들은 90년대 초 아파트마다 달린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라고 명하여도 저항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느 날 행정지시에 의해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이 모두 사라져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라고 캠페인을 했어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으나, 비닐봉지를 유료화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말하자면 환경적인 문제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수용할 생각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이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갯벌을 파괴하고 댐을 건설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원자력발전소를 더 만들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정책들만 생산해 내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환경운동이 지난 10년 간 시민운동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변한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이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새로운 의식을 기반으로 출현하였고, 또 성장해 온 것이다.

### (2) 지속 불가능한 사회와 경제

한편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간 더욱 더 대외 의존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자원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1개월만 에너지자원을 수입할 수 없다면 전력은 끊어지고, 공장도 설 것이며, 농업생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지속가능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뿐만이, 중요한 광물(철, 구리 등)과 곡물(사료포함), 섬유(천연섬유), 목재 등 우리가 대외의존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의 재정'이라는 단체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원을 얻고 집 등 도시를 만들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면적은 1인당 3.8헥타르 필요하다,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평균 0.4헥타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일인당 3.4헥타르의 해외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www.rprogress.org).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1972년에 출판된 이래, 우리는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성장의 한계>에서는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지구는 자원위기, 인구증가, 공해물질, 에너지의 한계, 농업생산의 한계 등으로 공업생산, 인구 등 여러 가지 지표가 한계에 도달하여 하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경고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언젠가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생산의 한계는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 월드워치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생명신포>의 보고에 따르면 어획고, 콩의 생산, 경지면적 등 몇 가지 지표들은 이미 1990년을 경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구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속불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비를 줄여 자연으로부터의 착취와 또 생태계에 대한 폐기물의 압력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양식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외의존을 하지 않으면 전혀 살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원을 수출하고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와 그 국민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가야하는 명제,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2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이들의 존재가 없으면 조업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설사 떠나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는 이미 한국사회의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국민국가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어 버린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존재는 인간생태계에 있어서 극히 자연스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속가능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법과 제도, 의식은 아직 이들을 우리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3) 사회운동의 분화와 통합

1980년대의 한국사회에는 여러 갈래의 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에서 협동이 가능하였다.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고, 통일이라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심에 따라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나 통일만으로 모든 사회세력을 결집시킬 수가 없다. 1990년대부터 등장한 환경, 여성, 소비자, 참여민주주의 등의 시민운동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한 주체구조를 가진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는 다르다. 노동운동은 고용 안전이나 노사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다급해 환경문제나 여성문제 등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환경운동은 노동운동의 무관심을 타한 적도 있다. 환경운동단체가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면,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전노조는 환경단체를 비난하였다. 또 새만금 사업을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농업기반공사노조(민주노총 소속)는 신문에 환경단체를 비난하며 새만금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갯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여성단체들이 포르노추방을 주장하면, 문화단체들은 표현을 자유를 제약한다고 발끈한다.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와의 입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내부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단체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 임하는 입장도 단체에 따라 다르다.

한국사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층위의 부분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의 다원화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에도 느슨하지만 연대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WTO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는 연대운동, 통일과 관련된 연대운동, 인권과 관련된 연대운동 등 다양한 연대구조가 지금도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연대운동은 그 표방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자기들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따라서 연대운동에 힘을 쏟을 만큼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사회운동단체들이 현안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할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 가야하고 또 힘을 집결시켜야 하는가?

### (4) 생태사회모델의 지향

진보적 환경사회학자 쉬네이버그는 사회통합의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즉 ①경제적 합(Economic synthesis) ②사회적 합(Social Synthesis) ③생태학적 합(Ecological synthesis)로 나누어 보고 있다. 영어의 Synthesis의 말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것은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 즉 正-反-합에서의 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합이라는 말은 통합의 원리이며, 그 안에 반, 정도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합은 경제적인 효율과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의나 공정성, 그리고 생태학적 합리성을 복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합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발전이나 생태적인 합리성을 하위원리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생태학적인 합은 마찬가지로 생태적인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을 하위개념으로 위치 지운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경제적 합, 사회적 합, 그리고 생태적 합이 체계적으로 통합, 발전되어 간다는 변증법적 발전의 지향도 시사해 주고 있다.

실사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까지도 발전의 지상 원리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는 사회정의를 희생할 수 없으며, 생태계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것이 여성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소비자운동이든, 그리고 인권운동이든 간에 경제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새로운 지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에도, 고용의 유지라는 사회적인 원리가 높은 임금을 추구한다는 경제원리보다 우선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지도자들도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 사회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 혹은 사회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의 원리를 세워 볼 수가 있다. 사회적 공정성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운동은 일차적으로 노동-자본간의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분배정의는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근년 한국의 고용의 상당한 부분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또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노동-자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과의 분배보다는 사회적 공정성,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은 아직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과제이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을 중심으로 우리사회를 재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나는 우리나라, 나아가 지구가 처해 있는 생태학적인 취약성을 극복하는데는 사회적 공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

회적 공정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생태학적 합, 즉 생태중심으로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점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 한대로 아직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을 사회의 중심에 놓으려는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의 재개가 결정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일부에서는 개발주의이념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생태환경세력이 충분히 힘을 집결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통합으로서 생태사회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생태사회모델은 생태계와의 공정성, 생태계와 더불어 사회계, 경제계의 지속적인 생존의 지향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주요한 가치지향을 담고 있는 사회모델이다. 생태사회모델은 경제적인 성장이나, 사회적 공정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환경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생태사회의 모델은 자연과 공존, 공생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정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사회모델은 아직은 우리의 의식의 주변부에 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사회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생겨나고 각자 나름대로의 일감에 매달려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생태사회모델은 21세기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모델이 될 것이라고 것을. 지금 우리의 생태사회모델은 다양한 경쟁적인 사회모델을 제치고 우리 사회의 중심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담론의 수준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았고, 정부나 기업, 그리고 시민들은 이것이 장래에는 가장 중요한 생존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년 간의 우리 사회와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그 방향은 확실하다. 생태사회모델에 투신하는 것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은 하나의 부문운동이 아니며, 우리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운동인 것이다.

우리의 생태사회모델은 사회적 합을 추구하는 제 세력들과 연대하여야 한다. 이 사회세력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 모델—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세력은 그 대표들이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자기들의 울타리에서 한발 나와서 생태사회모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환경생태운동가들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태사회모델과 사회적 공정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회적 연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 < 토론문 > 노동운동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밝힌 민주노총의 입장

이 회 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1. 사회통합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 대두

-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제29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국제자유노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노동기구,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기구 등에서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하여 1)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과 사회정책간의 상호보완적인 사회통합적 노력을 강화할 것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과 작업장에 기초한 참여 전략을 강화할 것 3) 생산적인 고용과 사회적 이행프로그램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4) 작업장 관심사항과 공공적 관심사항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주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활동함.

-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는 전사회적인 영역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통용되고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세계의 현실은 전지구적 자유화와 개혁개방 그리고 세계화 관철을 위해 전쟁수단까지 동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력과 이에 맞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반세계화 세력간의 첨예한 긴장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속에서 유엔 산하 기구 및 특별총회의, 결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국가와 자본의 횡포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력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되고 이에 저항하는 반세계화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 등 서방선진제국은 리우+10 요하네스버그 대회를 대테러전을 위한 정치적 회의로 변질시키고자 할 것임. 따라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군사주의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번 국제회의에서 전세계 NGO 세력들과 연대하여 인간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빈곤의 세계화를 타파하기 위한 반세계화운동과 생명·평화를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 리우회의 이후 한국정부 10년에 대한 평가

-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은 1995년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중앙조직인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함.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단결권 강화 등 ILO의 관련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적인 빈곤퇴치와 빈부격차의 해소, 작업장에서 환경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복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적 정책인 사회개혁투쟁 등이 전개되기 시작함.

- 그러나 정부는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리우환경회의의 결의와 이후 수차례에 걸친 ILO의 단결권 준수권고와 노동탄압 중단에 대한 요구에도 세계화

와 개방화 그리고 경제발전의 우선이라는 국가와 기업의 정책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차원에서 기업별, 산업별, 사회적 차원에서 노사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 10년 간 추진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제한적인 실업대책,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약간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아젠다 21의 제 29장의 결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배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기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경제개발과 성장중심의 구시대 패러다임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합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멀. 그 결과 정부가 노사정 참여모델이라고 자랑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고립·약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과 정리해고를 강요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무관리기구로 전락하여 무용지물화되고 있음.

###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과 과제

-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야기되는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등 비정규 노동의 불안정성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격차 해소 및 사회적 불평등의 현상인 빈곤의 타파
- 2)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생계비 보장
- 3) 공무원,교사 등 노동3권 확보와 노동자에 대한 구속과 폭력등 인권침해 근절
- 4) 기업별 노조의 극복과 산업별 조직건설 통한 산별교섭체제 구축으로 대등한 노사정 관계 확보하여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정책수단 강화.
- 5) 작업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사회적 영역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과 건강 그리고 공해추방을 위한 환경협약 체결투쟁과 소비패턴의 변화 모색
- 6)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재등에 대한 공적인 통제시스템 확보와 경영참여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반대 통해 경제주권 실현
- 7) 인권, 평화, 여성, 환경, 기업과 사회의 민주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들간의 통합적인 연계의 강화와 공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
- 8) 비정규, 장애, 이주, 여성, 실업노동자의 빈곤타파와 교육, 보건의료, 조세, 사회복지등의 사회개혁을 통한 공공성의 확대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 9)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WTO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전략 모색을 통한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마련
- 10) 반전반세계화운동을 통한 평화실현과 군비축소운동을 통한 빈곤타파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적인 발전전망 마련
- 11) 개발중심의 경제발전과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울뿐인노사정위원회의 해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적인 노사정 파트너십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의 개발 \*\*

## 〈 토론문 〉 생태사회를 위하여

홍 성 태 (민교협 사무차장 / 상지대 교양과, 사회학)

### 1. 생태론적 전환의 시대

- 현대는 '생태위기의 시대'이다. 생태위기관 생태계의 순환이 위기에 놓인 상황을 뜻한다. 이것은 우선 자연자원의 고갈과 오염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자살적 결과'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생태론적 전환'은 이러한 시대인식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절박한 요청이다. 그리고 이 요청은 생태위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생태학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태론적 전환의 요청은 '과학적 요청'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과학의 한계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 2. 생태학과 생태주의

- 과학으로서 생태학과 정치적 신념체계로서 생태주의는 구분될 수 있다. 생태론적 전환이라는 과제는 '공업문명의 전환'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단순히 '과학'에 의해 제시되지 않는다.

- 정치이념으로서 생태주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위기'의 현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공업문명'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엄청난 생산력인 동시에 자살적 살상력이기도 한 공업력을 충분히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 3. 생태사회의 이상

- 생태사회는 파괴적 '공업문명'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 이상형이다. 이 사회는 '인더스트리아'의 악몽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순환형 (재)생산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과제가 추구되어야 한다.

-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데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평등'의 요청이다. 생태주의는 '한계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구의 물리적 한계가 생태주의의 객관적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평등의 요청은 절대적 요청이다. '이긴 자가 다 가지는 사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둘러싼 경쟁을 끝없이 강화하는 극단적인 반생태사회이다.

- 환경운동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이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발독재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좋은 것에 대한 감각의 상실'을 가져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대응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모두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 대한 꿈 위에서 피어나는 꽃일 것이다. \*\*



# 쟁점 토론

## - 1부 -

### <쟁점1> 시민사회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주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 <쟁점2> 교육운동의 새로운 전망 : 지식기반사회와 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쟁점3> 언론 개혁인가, 활용대상인가

주관단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쟁점4>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

주관단체 : 공소시효 배제운동 협의체

### <쟁점5>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주관단체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쟁점 토론 1

# 시민사회는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 기획의도 |

지난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참사로 인해 14명의 매춘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1999년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로 인해 4명의 여성들의 사망한 이후 여성연합은 실효성을 상실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현재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을 입법 청원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 보면서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만연한 성매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법조계, 일부 경찰)과 성매매를 부추임과 동시에 매춘여성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알선업주 및 일체의 성매매 매개체를 사회에서 퇴출시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성매매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유엔협약 등 국제사회에서의 성매매에 관한 관점 및 각국의 정책과 입법현황에 대해 비교하여 한국의 성매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폭 넓은 논의를 모아보고자 한다.

### · 발 제

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 김현선(새움터 대표)
2. 조영숙(여성연합 국제협력 실장, 여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

### · 전세토론

## < 발제문 >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안 해설

김 현 선 (새움터 대표)

※본 내용은 아직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부 내용은 한국여연의 공식적인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후에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본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 1. 개요

가. 제안배경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에서 요약하여 정리함)

#### 1)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의 심각성

2000년 9월 19일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군산시 개북동 화재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의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의 산업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심각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관한 비가시성과 사회적 무관심, 효과적 정책의 부재, 현행법률의 비실효성, 관련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유착비리 등으로 인해 성매매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피해여성들 또한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 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은 13세에서 20세로 아동에 대한 성매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가정체체, 빈곤, 가출 등으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광고나 사기모집활동에 취약한 상태이다. 성매매에 유입되면 이득을 늘리려는 성매매업소와 직업소개소에 의해 빈번하게 인신매매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지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성매매업소 유형을 경험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고통과 빛의 굴레, 성적 인신매매, 포주나 감시인으로부터의 폭행과 강간, 손님으로부터의 폭행과 강간, 감금, 위협, 화대착취, 성매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포주와 유착되어 있는 경찰에 의해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수배되고 있다.

#### 3) 현행법률의 비실효성

##### ▶ '윤락'이라는 용어사용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불가능하게 하고 '범죄자에 대한 선도의 측면에서 접근하게 한다.

#####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과 성 구매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 여성이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되면서, 그 여성이 성매매의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인신매매, 감금, 착취, 폭행 등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매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의 제한, 성폭행 및 가출의 경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오히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도 소외당함으로써 성매매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지원체계의 부재

윤방법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선도시설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격리 조치로서의 의미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교육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적 지원 조항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여성 관련 부서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조항의 사문화

인간의 성(性)이 거래되는 성산업에서 수요를 차단하지 않고서 근절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단속되는 남성들은 그대로 귀가조치되며 처벌조항은 완전히 사문화되어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다.

##### ▶ 범죄자처벌에 대한 비실효성과 집행의 문제점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유형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의 범죄자 규정은 매우 단순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관련법률을 보면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광고자, 모집자, 포주, 감시인, 인신매매자 등은 물론이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수입을 먹고사는 남성들도 포주로 규정되며 처벌받는다.

현행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는 기소율이 매우 낮다.

##### ▶ 채무 무효규정의 사문화

성매매와 관련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법률 집행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그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스스로 자신이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일선 경찰에서 오히려 여성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포주에게 빚을 지고 도망친 여성들을 전국에 수배하는 등 법 집행자의 인식 부족과 포주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4) 국제협약에 부응한 국내의 법률적 조치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많은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조치와 피해자지원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한국정부도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이미 가입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국내에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약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이 협약은 1950년에 제정되었으며 한국은 1962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1)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인 또는 유괴하는 자, (2)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 (3)성매매 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4)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또한 이 협약의 제6조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또는 종사 용의자들이 특별 등록, 특별 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 협약은 1979년에 제정되었고 한국은 1984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제6조에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 160여개의 비준국에서는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 협약에 대하여 한국은 2000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인신매매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며, 서로 협력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5) 한국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분류

2001년 7월 미국무성은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분류하였다. 한국 성매매 확산의 주범이 미군의 주둔과 기지촌의 형성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미국은 한국의 성매매문제를 평가할 자격이 없으며, 평가 이전에 먼저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동안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시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이고 매개국이다. 젊은 한국여성들은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주로 미국이나 서방국가 그리고 일본 등지로 인신매매된다. 많은 국가들의 외국인여성들, 주로 중국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세계 각 국으로 인신매매된다. 인신매매는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한 수로를 통해 많이 일어난다.

한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분야에서 리더인 것에 비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악화되고 있는 인신매매문제와는 거의 싸우지 않고 있다. 위조된 비자의 소유 또는 주민등록증의 불법판매와 같은 밀입국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기소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인신매매행위에 역점을 두어 다루는 법률이 없다. 아동들에 대한 납치와 판매, 또는 아동들의 성적 서비스를 사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들은 있다. 그리고 강간과 같은 범죄에는 최고형량을 부여한다. 부패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가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외국인들은 이민위반자로 처리되고 추방된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나. 기본방향

##### 1) "성매매" 용어의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용어였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고,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매춘관련 법률에서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관계"로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매매춘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이다. 또한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도덕적인 잣대는 상대남성은 사회적 필요악으로 제외되며, 오로지 성매매여성들에게만 강요되는 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사회는 성매매여성을 "윤락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

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성매매여성들은 비도덕적인 여성"이라는 낙인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이러한 견해에서 성매매여성들은 범죄화되거나 선도의 대상이 된다.

"매매춘"이라는 용어사용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법은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였다.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 2)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 ① 다양한 성매매범죄 규정

산업형성매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입경로와 성매매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범죄를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의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이 법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강요·광고·모집·유인·권유·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 ② 처벌강화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수준으로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였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장부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입은 빛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포주에게 착취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산매춘업소에만 국한된 착취가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구조이다. 이렇게 성매매는 포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득을 준다. 따라서 이 법은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④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성매매업소들이 대부분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그 업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은 신고자나 자수자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특정범죄신고자로서 보호하며, 불법수익 몰수금액중 3%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3) 강제된 성매매의 피해자 및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2000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라 이 법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청소년들과 성매매외국인, 그리고 장애인들은 모두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하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법에서 "성매매된 자"란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다. 성매매된 자에는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강요행위·심각한 상해·협박·위계·채무관계·마약사용"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 4) 성매매된 자(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 ① "성매매된 자"에 대한 면책조항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의 결과로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 ②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한 조사나 재판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등 인권보호조항을 강화하였다.

### ③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성매매된 자나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한 긴급보호시설(15일 미만) 및 자립지원시설(6개월 미만, 1회연장 가능),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입퇴소는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시설기간에 상관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성매매행위자중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과 내용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시설과 상담소의 이용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보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5)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미국 SAGE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성을 사는 사람들의 재범율은 80%에 이르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4500명중 재범율은 단지 2%에 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자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다.

이 법은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사회봉사·수감명령·보호관찰·교육상담 위탁·치료위탁)을 명령한다.

## 6)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①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범죄자 처벌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은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한다.

### ② 피해자보호 및 지원체계강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 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내국인 성매매된 자와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관련기관의 협력

또한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 등과 같은 관련기관들은 범죄수사 및 피해자지원활동과 같은 조치를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이 법은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 내용은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성매매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성매매예방교육·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국제적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 강화 및 국제공조 등이다. \*\*

# 교육운동의 새로운 전망

## :지식기반사회와 문화예술교육

기획의도 | 교육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간 전개된 교육운동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 교육운동의 전략을 검토하며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 · 발 제

'문화교육시민운동' : 교육개혁/문화개혁/사회개혁의 브릿지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 · 토론 : 이순철(전교조), 신광영(민교협 교육·정책위원장),

박거용(교수노조 부위원장),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 발제문 〉 '문화교육시민운동' : 교육개혁/문화개혁/사회개혁의 브릿지

심 광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1. '문화의 세기'가 도래했다고는 하나, 문화는 여전히 사치나 오락, 홍보와 상품의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 문화예산 1조원 시대가 도래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리터러시'의 함양, 예술인프라와 문화인프라의 구축은 요원하며, 반면 문화상품 개발과 관광위락 시설 개발에는 예산이 과잉투자되고 있다. 대중매체 시대에 '문화의 산업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상업주의가 문화 전반을 휩쓸면서 문화예술의 비영리적인 성격과 자율성은 크게 위축되고, 문화적 공공성 자체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로 공교육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빌미로 정규 교육과정에 실용주의적/시장주의적 프로그램과 제도가 전격 도입되고 있다. 수용자 중심 교육, 이수시간 단축, 자율선택이라는 명목으로 국/영/수 같은 중점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치환하고 예체능교육을 대폭 축소한 7차 교육과정, 민간 귀족학교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계획, 기초학문을 배제하고 실용교과 위주로 통폐합을 강제하려는 국립대학발전계획 등이 단적인 사례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와 교육은 환경과 더불어 시장논리로 재단될 수 없는, 인류 최후의 자원이라는 점이 점점 더 간과되고 있다. 문화와 교육마저 시장논리로 환원되면, 인간 능력의 다양성과 잠재력 자체가 급격히 소진되고 파괴될 것이며, 이는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환경파괴로 지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만큼이나 인류의 미래에 위협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G7국가들조차 환경은 물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시장논리의 무차별 적용을 피하고 인적 자원의 풍부한 잠재력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히려 공공성의 원칙을 새롭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경우 지난 십수년 간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 공교육의 기반이 과거에 비해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상당한 교육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교육예산의 비중 역시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개발지상주의의 낡은 도식에 사로잡혀 문화와 교육 부문에도 시장논리를 무차별 적용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래사회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입시경쟁에 시달리며 확실적인 문화상품이 양산하는 표피적인 감각주의로 해소에 매몰되고 있고, 좌절된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며 돈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이민'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예술가들 역시 문화산업의 대세에 밀려 창조적인 예술적 실천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문화의 세기'와 '평생교육의 세기'가 열렸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문화 붕괴'와 '교육 붕괴'일 뿐이다.

2. '문화의 붕괴'와 '교육의 붕괴'는 동전의 양면이며, 이를 극복하려면 그간 분리되어 온 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이 '문화교육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개념틀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교육운동'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본다.

(1) 초중등 교육과정에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과 미디어교육을 적극 도입하여 '문화적 리터러시' 함양에 역점을 두는 '문화교육' 중심으로 교과과정 전반을 재편하는 것

(2) 교육운동 단체와 교육학 전문가들은 물론, 예술가와 지식인, 학자와 학부모들 간의 광범한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문화교육'의 이념에 맞게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모두를 대대적으로 재편토록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실천을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화교육시민운동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현장을 민주화하려는 교사들의 집단적 노력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으나 학교운영의 민주화나 공교육 투자 강화를 원론적으로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대중문화와 인터넷에 매료되어 학교교육에 관심을 잃은 학생들이나, 문화자본과 지식자본의 육성에만 관심을 가진 교육관료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적 욕구가 왕성하고 멀티미디어적 감수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관심을 다시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의 틀에 갇혀 있는 정규 교과과정 자체를 멀티미디어적인 감수성에 기초한 문화적 참여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내용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지 못하며, 그럴 경우 행정부나 국회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전제 하에서만 공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가능하다.

2)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허덕이거나 승산없는 교육이민에 목숨을 거는 학부모들에게 현행의 교육과정을 '지식정보교육 위주'에서 '문화교육 위주'로 재편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얼핏보면 "소귀에 경읽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의 '결핍'이 문제시되었던 구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오히려 정보의 '홍수'가 문제이므로 암기위주의 교육 대신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가치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판단력'과 분산된 정보들을 새로운 틀로 묶어낼 수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 '멀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만이 미래 경쟁력의 토대임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관심을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되돌리는 것은 정부나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이득이다.

3) 어려운 일은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멀티미디어 시대의 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편하여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전환하는 일일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문자텍스트만으로 짜여진 정보와 지식의 암기, 계산적이고 도구적이며 분과학문적으로 분할된 전문지식의 나열 형태로 짜여져 있어, 오늘날과 같은 멀티미디어적이고 하이퍼텍스트적이며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부적합하며, 다양한 감수성과 창조적 상상력의 구현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합적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려면 창의력과 감성 및 상상력 교육의 요체인 예술교육과 매체 해독과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의 적극적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 양자를 묶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교사나 교육학자만이 아니라 예술과 인문학, 미디어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4)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할 점은 이렇게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이 곧 국어/영어/수학/사회/자연과학과 같은 지식 습득위주의 교육 분야를 위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지식교육과 예술교육/미디어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의의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단순 암기의 차원을 넘어)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예술교육/미디어교육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매체적인 문화적 리터러시를 키워주고 '주체중심적' 사고와 상상력,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리터러시 교육'은 다음과 같은 3 축

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1) 우선 크게 위축되고 있는 예술교육의 비중을 다시 늘림과 동시에

(2) '연극을 통해서 본 공동체 윤리', '미술을 통해서 본 환경과 생태 위기', '문학과 영화', '도시와 영상', '평화와 미디어', '수학과 미술', '상대성 이론과 전위미술', '어린이 박물관'과 '어린이 방송국' 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 지식교과와 주제들과 예술과 미디어를 '절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식교과 커리큘럼 자체를 재구성한다.

(3) 나아가 예술교육 자체도 장르 중심의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기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와 재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차이를 통한 공존의 윤리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예술과 미디어문화 전반에 대한 철학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 분야의 제작 및 이론 전문가들의 대규모 참여와 기존 교사들의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5)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시설 등 다양한 공공문화기반시설과 교육현장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부와 교육부, 문화시설과 지자체 단위의 교육청과 학교들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관건이다. 나아가 문화부와 지자체에서는 현재 갖 시작되고 있는 미디어센터를 광역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에 예술교육과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우선 광역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지역미디어센터들을 문화교육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3. 이런 계획은 정치적 부패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으로 비취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면한 정치적 부패나 경제적 양극화, 환경 파괴 문제의 해결을 사회적 하드웨어의 파괴에 대처하는 문제에 비유할 수 있다면 문화적 양극화나 문화적 권리(문화적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향유할 권리)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가 작동불가능한 상태에 처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가시적인만큼 누구나 심각성을 느끼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비가시적이어서 완전히 기능중지 상태에 처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느끼기 쉽지 않다. 오늘날 사회적 소프트웨어는 문자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미디어적인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이런 전환에 필요한 학습을 위한 투자는 철저하게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다. '자립형 사립고'라는 발상은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내용의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그 혜택을 가진 자들에게 할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의 재생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공교육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세기의 교육이 문자 중심의 지식 리터러시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1세기의 교육은 멀티미디어 체제에 맞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공교육 체제 역시 이에 걸맞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교육은 20세기형으로, 사교육은 21세기형으로 갈라지는 기현상에 봉착할 것이며, 다음 세대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운동은 이제 제도적 민주화나 교육예산의 증대라는 양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의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본다(지식교육과 문화교육의 접목).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교육 차원에서 지식교육과 문화교육의 접목을 통한 사회적 소프트웨어 재생산의 탈양극화라는 과제가 단지 교육운동단체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교육세 증대와 같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은 다시 21세기형으로의 교육내용의 전환과 그 기대효과의 타당성 입증을 통해 학부모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같은 필요성은 사실 교육전문가만이 아니라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 자신이 감지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문제해결의 방법을 '대안학교'나 '교육이민' 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공교육의 문제를 사교육으로 치유하려는 것과 다름없고, 문제의 근원을 방치하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진단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은 교육운동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교육운동단체 이외에 문화운동단체/환경운동단체 등이 교육내용의 재프로그래밍 차원에서 결합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광범위한 재인식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력 형성을 위해 시민운동단체들의 광범위한 결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붕괴와 교육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구성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시민사회적 캠페인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교육운동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결합된 <교육개혁시민연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대는 문화운동단체와 환경운동단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운동단체들을 아우르는 <문화교육을위한시민연대>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광범위한 시민연대에서 '문화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원론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공교육의 내용이 21세기 사회변동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내용의 변화를 포함하는 이런 광범위한 연대형성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과 예술가, 지식인들의 장기간의 협동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와 일반 시민, 여론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앞당길 수도 있다. 기초교육=예술교육(문화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초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중인 프랑스의 경우(2000년 12월 자크 랑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전면적인 문화교육의 실시를 선언)에서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의 상호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오래 전부터 미디어교육 및 예술교육을 기초교육과정의 중심교과로 발전시켜 온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의 국가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육을 대안학교나 특별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의 기초이자 중심교과로 설정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꿈만은 아닌 것이다. '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은 지난한 과정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책임질 현재의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의 악몽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과 민주주의적 정신을 강화함으로써 "20:80 사회"라는 묵시록적 미래를 예방하려면 우리 사회의 진보적 역량을 '문화교육운동'으로 결집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

<별첨> : "교육 개혁과 문화교육 운동 :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사회로 이행을 위해"(<문화과학> 27호, 2001년 가을호, 15쪽-49쪽)

#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할까 : 개념과 방법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원장)

## □ 교육 개혁과 문화교육 운동 : 지식 기반 사회에서 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 1. 들어가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이며, 신입생들 3명 중 1명은 전과를 희망하고 있고, 신입생들의 가장 큰 고민 거리는 적성 및 진로(33.1%)와 학업(24.2%)이라고 한다<sup>1)</sup>. 말하자면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적성 및 진로와 무관하게 일단 서열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고, 입학 후에도 소득이 높고 안정된 취업을 위해 전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빈부의 양극화가 학력을 매개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소득이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대학 진학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경향에 대해 치유 기능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는 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아가 일부 사립 대학에서는 이런 양극화 경향을 기정 사실화하고 기부금 입학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가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립형 사립고')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육 운동 단체들은 이런 정책이 고교 평준화 제도 붕괴와 교육 기회 평등권 훼손을 초래하여 교육 양극화 현상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 교육 이념과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여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고 평준화 교육의 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교조 측은 이미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과열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된다면 자립형 사립고 입학에 위한 입시 과열로 중학교 교육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측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교육부 정책에 반대, 서울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교육부 정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이는 교육 문제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명칭 개정에서부터 분명히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공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늠

1) "서울대 신입생 2명 가운데 1명은 관리직/전문직 등 고소득층 자녀이며, 서울 등 대도시 출신이 전체의 77%에 이르러, 가정 형편이 넉넉한 대도시 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입생 3명 가운데 1명은 다른 학과로 전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62.2%로 지난해의 60.7%에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입생의 35.7%가 '앞으로 전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의대와 치대, 법대 등 학과 전공과 전문 직업이 직접 연결되는 학과는 전과 희망자가 각각 0.9%, 8.0%, 11.2%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인문대(57.2%)와 생활과학대(63.2%) 등은 전과 희망자가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한겨레 2001.8.4 14면).  
 2) 여기에 일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 역시 대부분의 사립고들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정책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려 난항을 겪을 것 같다.

하게 해주는 지점이다. 전자의 경우 공교육을 넓은 의미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공교육이 위기에 처하면 이를 사교육이나 평생 교육, 사이버 교육, 제택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 공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처한 문제를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교육 자체의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게 보여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입장 차이에는 여러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교육 개혁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실질적인 쟁점 대립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교육 축소를 둘러싼 쟁점이 본격화된다면 이는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보다도 더욱 광범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문제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주목하기보다는 현재의 대립을 경쟁 교육인가 평등 교육인가라는 원론적 대립으로 보는 것 같다<sup>3)</sup>. 하지만 이 문제의 쟁점이 경쟁이나 평등이나, 다양성의 도입인가 평준화의 유지인가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널리즘적 단순화에 불과하며, 자칫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 쉽다. 실제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 운동 단체들의 주장의 요지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제고 자체나 경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교육의 체계 밖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력 중심 사회가 입시 위주 교육을 부채질해 온 고질적 병폐<sup>4)</sup>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고소득층 자녀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의 원리를 유지해야 하며,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공교육에 전면적 투자를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전교조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러므로 교육 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핵심 쟁점은 경쟁이나 평등이

3) 두 관점의 대립은 7차 교육 과정 개정(선택 과목 도입과 수준별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외국인 학교 개방 등을 둘러싸고 매년 입장 차이를 드러내 왔다고 한다. 입장 차이를 이렇게 보면, 사학재단측에서 주장하듯이 전교조의 입장은 '지나친 평등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법하다(중앙일보, 2001.8.10. 3면).  
 4) 흔히들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입시위주교육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입시위주교육'은 대학입시의 유무가 아니라 '학벌사회'라는 사회적 관행과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입시제도를 없애거나(가령 대학입시를 없애고 그대신 모든 취업과정에서 직종별로 고시제도와 비슷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주장)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입시위주교육'이라는 병폐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실제로 대학입시가 없어진다고 해도 사회에서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므로 입시경쟁은 취업경쟁으로 대체되어 시간적으로 지연될 뿐이며, 이때에는 대학교육이 다시금 '취업중심교육'이라는 새로운 병폐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취업경쟁은 대학교육과정에서 보다 높은 소득과 안정된 직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포기하게 하며, 사회 진출시 더욱 심각한 병목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미 현재의 대학교육도 거의 '취업중심'의 학과/전공선택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시위주교육에 진저리를 내며 안정된 직장마저 포기하고 '교육 이민'을 떠난 수많은 중산층들의 실패 사례도 입시의 유무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결국 문제는 입시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과 요구로부터 학교교육의 상대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5) "어떤 경우에도 학력중심사회는 포기할 수 없다. 학벌을 비판하는 주장은 곧잘 입시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는 인과관계를 잘못 본 것이다. 학벌주의가 입시의 과열을 부른다가 올바른 인식이다...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은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인간적인가에 있기보다는 경쟁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교육에 전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반대할 사람들은 극소수 기득권층뿐이다. 아무리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하더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전면적 투자없이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따라 경쟁의 결과는 판가름 날 것이다. 이를 무시해온 정부는 결국 사교육 시장 확대를 방조해 권력과 부가 보다 용이하게 학력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교육이 계급적 재생산의 도구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155-156). "입시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정부나 대학이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정부나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왜 이렇게 하는 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결론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은폐하는데 쓰이는 말이다. 첫째, 정부와 대학은 현행의 학교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대학이 무능력하여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도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대학